



# 주간 통일정세

2012-35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내정세

#### 가. 정치

- **김정은 이란 방문 안한다(종합)(8/22, 블룸버그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다음 주 이란 테헤란에서 열리는 비동맹운동(NAM)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이란 관영 IRNA통신을 인용해 보도함.
  - IRNA통신은 이날 비동맹 회의 대변인 모함마드 레자 포르카니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전함.
  
- **北 리영호, 김정은과 같은 줄에 섰다 해임?(8/23, 교도통신)**
  - 북한의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동행한 행사에서 같은 줄에 나란히 선 것이 문제돼 실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23일 교도통신이 보도함.
  - 지난달 8일 노동신문 1면에 리영호가 북한 지도부의 평양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시 김정은 제1위원장 옆에 나란히 서있는 사진에 리영호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서는 위치를 나타내는 맨 앞쪽 줄 바닥의 흰선 부근에 서있었다고 통신이 전함.
  - 이에 대해 북한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흰선은 최고지도자의 위치를 나타내며 여기에 서는 것은 최고지도자에 대한 도전을 의미하는 금기 행위"라며 "이것이 리영호를 실각시키는 발단이나 구실이 됐을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함.
  
- **北 김경희 건강 악화(8/24, 산케이신문)**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66) 조선노동당 비서가 업무 복귀가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고 24일 산케이신문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 이 신문에 따르면 김 비서는 비밀리에 중국에서 장기(臟器) 질환을 치료했지만 호전되지 않았으며, 체중이 38kg까지 급감했다는 정보도 있음.
  -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달 말 능라인민유원지 준공식 당시 김 비서가 김정은 제1위원장과 함께 놀이기구를 타는 장면을 담은 사진은 "건강에 대한 불안을 은폐하기 위한 연출"이라고 신문이 인용한 소식통은 말함.
  
- **北 김정은, 이번엔 동부전선 여군부대 방문(종합)(8/24,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제1위원장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는 동부전선에 있는 여성 해안포중대인 인민군 제4302군부



대 산하 '감나무 중대'를 시찰했다고 24일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최고사령관과 동무들이 손을 잡고 기어이 조국통일을 이룩해 대원수님들(김일성·김정일)의 업적을 만대에 빛내야 한다"며 "(나는) 동부전선의 군인들을 믿으며 동부전선의 한 개 초소를 지키는 여성혁명가들인 동무들을 굳게 믿는다"고 여성중대 군인들을 격려함.
-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의 이번 군부대 시찰에 누가 동행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조선중앙TV가 이날 낮에 내보낸 김 제1위원장의 감나무 중대 시찰 관련 사진에서 김 제1위원장의 부인 리설주가 동행한 모습이 확인됨.

● 北 김정은, 내달 방중 추진(8/24, 연합뉴스)

-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다음달 중국을 방문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북-중 관계에 밝은 한 소식통이 전했다고 24일 연합뉴스가 밝힘.
- 김정은 제1위원장은 국빈 방문 형식으로 중국의 현직 최고지도자와 새 지도자를 만나려 할 것이며, 김 제1위원장의 방중은 이달 장성택 부위원장이 중국을 찾은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였다고 그는 강조함.

● 김정은, UFG연습에 "전면적 반공격작전 서명" 위협(8/26,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과 관련해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다"며 "전면적 반공격전을 위한 작전계획을 검토하고 최종수표(서명)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밝힘.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 마련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혁명 영도 개시 52주년 '8·25 경축연회'에 부인 리설주와 함께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연설을 했다고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연설에서 "나는 이미 서남전선의 최전방부대에 나가 만약 적들이 우리 영토와 영해에 한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즉시 섬멸적 반타격을 안기고 조국통일 대업을 성취하기 위한 전면적 반공격전 이행에 대한 명령을 전군에 하달했으며 이를 위한 작전계획을 검토하고 최종수표했다"고 말함.

● 北 김경희, 군복 차림에 '건재 과시'(8/2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선군혁명 영도 개시 52주년 '8·25 경축연회' 참석과 모란봉악단의 공연 관람 소식을 전하며 김경희 당비서가 배석했다고 밝힘.
- 중앙통신은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이 동부전선 시찰의 길에서 모란봉악단 공연을 관람하고 최전방 동부전선의 지휘관과 군인들을 대상으로 연회에서 연설했다고 밝혀 공연 관람과 연회가 동부전선 지역에서 이뤄졌음을 알 수 있음.



■ **김정은동향**

- 8/20, 김정은 원수, 쿠바 내각 수상 · 라오스 주석 · 시리아 대통령 · 캄보디아 국왕 등 各國 당 · 국가수반들의 '원수 칭호 수여' 축전에 답전(8.20, 중통)
- 8/24, 김정은 최고사령관, 조선인민군 제4302군부대 관하 감나무중대 시찰(8.24, 중방 · 평방)
  - 군부대 시찰 날짜와 수행 간부 未언급
- 8/26, 김정은 黨 제1비서, 전선동부 시찰중 부인 리설주와 함께 '선군정치 시작 52돌 경축 모란봉악단의 화선공연' 관람(8.26, 중통 · 중방)
  - 최룡해, 현영철, 김경희, 장성택, 김정각, 현철해, 김원홍, 리명수, 오극렬, 김창섭, 육·해·항공 및 반항공군·전략로케트군 지휘성원 등 대거 동행
- 8/26, 김정은 黨 제1비서, 선군혁명영도 52돌 계기 黨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마련한 '8.25 경축 연회 참석' 및 직접 연설(8.26, 중통 · 중방)
  - 당 중앙위 · 당 중앙군사위 · 국방위 성원들, 육 · 해 · 항공 및 반항공 · 전략로케트군 지휘성원들, 동부전선 연합부대장들 연회 참석
  - △ 8.25은 4.25과 더불어 우리 혁명무력건설사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역사적인 날임. △ 나는 이미 적들이 우리의 영토와 영해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튀긴다면 전면적반공격전으로 이행할 데 대한 명령을 전군에 하달, 이를 위한 작전계획을 최종수표했음.
  - △ 김정일의 선군의 길을 따라 조국과 우리혁명을 위하여 변함없이 곳곳이 한길을 걸어 나갈 굳은 마음을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함.(\* 김정은 연설 주요내용)
  - 김정은,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 지원 일꾼들에게 '감사' 전달(8.26, 중방)

■ **기타 (대내 정치)**

- 김일성종합대학 국제학술토론회 개막식, 8.21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진행(8.21, 중통 · 중방)
- 최영림 총리, 평안북도 향산군 · 구장군 수해피해상황 점검 및 복구정형 현지 료해(8.23, 중통 · 중방)
- 김일성·김정일 동상 제막식, 8.24 인민무력부에서 진행(8.24, 중통 · 중방)
  - 최룡해, 현영철, 김경희, 김정각, 장성택, 김영춘, 김기남, 현철해, 오극렬 등 참가



나. 경제

● 北 라선경제특구 활기...곳곳에 공사(8/22, 연합뉴스)

- 북한은 지난 20일 개막한 제2차 라선국제상품전시회를 맞아 중국과 영국, 러시아 등의 투자자와 방문객은 물론 AP통신을 비롯한 기자들에 대해서도 제조업과 관광, 교통 허브로 변모하는 라선지구를 둘러볼 기회를 제공했다고 22일 연합뉴스가 전함.

● 北나선 '동북아 무역중심' 희망(8/24, 연합뉴스)

- 20일부터 나흘간 열린 제2차 나선국제상품전시회에는 북한 외에 러시아, 중국, 스웨덴, 대만, 체코 등의 100여개 기업이 참가해 전자, 의약, 자동차, 식품 등 분야의 상품을 선보였다고 24일 연합뉴스가 전함.  
- 나선시는 외국 기업인을 위한 투자정책 심포지엄을 열어 "외국인 투자 유입을 늘리기 위해 큰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을 정부가 보장한다. 무역, 투자, 교통, 통신, 통화, 관광분야에서도 (외국기업에) 우호적 조건이 제공된다"고 강조함.

● 北, 대중소비품 가격 인하정책 시사(8/26, 연합뉴스; 경제연구)

- 북한의 경제잡지인 계간 '경제연구' 최신호(2012년 3호·7월30일 발행)는 '현시기 가격전략을 바로 세우는 것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중요 요구'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사회주의에서 가격 전략을 바로 세워 인민생활을 향상시키자면 우선 소비품의 가격 수준을 체계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26일 전함.  
- 잡지는 이어 소비품 가격의 인하 효과에 대해 "모든 근로자가 같은 화폐 수입을 갖고도 더 많은 소비품을 살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빨리 높일 수 있게 한다"고 설명함.  
- 이어 소비품 가격의 인하 효과에 대해 "모든 근로자가 같은 화폐수입을 갖고도 더 많은 소비품을 살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빨리 높일 수 있게 한다"고 설명함.

■ 기타 (대내 경제)

- 라선경제무역지대 투자토론회, 8.21 중·러 등 관계자들 참가下 진행 (8.22, 중통)  
· 무역지대 자연지리적 조건과 개발실태, 전망계획을 보여주는 편집물 시청

다. 군사

● 북한군 시신 1구 중부전선 한탄천서 발견(8/26, 연합뉴스)

- 최근 집중호우 때 강원도 철원군 소재 한탄강 지류에서 북한군 시신 1구



가 떠나려와 군 당국이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에 인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연합뉴스가 전함.

- 군 관계자는 26일 "지난 23일 오후 한탄강 지류인 한탄천에서 북한군 시신이 떠나려오는 것을 근무 중이던 중부전선의 모부대 소속 초병이 발견해 인양했다"며 "북한군 시신은 유엔사 군사정전위에 인계됐고 향후 북측에 시신을 인도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힘.

### 라. 사회·문화

#### ● '황강댐 방류' 北 황해도 최고 446mm 폭우(8/20,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17일 황강댐을 방류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사흘 동안 황해도 지역에 400mm 이상의 큰비가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20일 연합뉴스가 전함.
-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18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황해도와 함경남도·평안남도 남부지역에 적게는 100mm에서 많게는 4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짐.

#### ● 北장애인선수단 런던행...첫 올림픽 출전

- 북한 장애인 선수단이 오는 29일 런던에서 열리는 제14차 장애인 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비행기로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함.
- 북한이 장애인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선수단 단장은 김문철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음.

####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평양은 경축행사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며 「청년절(8.28)」 경축 행사준비 완료(운송수단 보장, 봉화예술극장 등과 예술단체 예술인들의 공연준비, 옥류관 등 식재료 완비 등) 자랑(8.23,중통)

## 2. 대외정세

### 가. 일반

#### ● 러시아 나훗카서 북한문화제 개막(8/21, 연합뉴스)

- 북한은 20일 해방 67주년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기념해 러시아 극동 나훗카에서 문화제를 개막했다고 21일 연합뉴스가 전함.
- 이날 러시아 주재 북한총영사관이 있는 나훗카에서 열린 문화제에서 북한은 그림과 응용미술품,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작품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기록영화도 선보임.



- **北장성택 방중 목적은 대규모 차관 조달(8/21, 미국의소리(VOA))**
  - 최근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목적은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차관을 얻으려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1일 보도함.
  -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의 던칭 연구원은 이 방송에 "북한이 경제난을 해결하려면 경제발전을 위한 종자돈이 필요한데 이를 조달할 곳은 중국밖에 없다"며 장성택이 중국을 방문한 이유는 황금평 개발보다는 대규모 차관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함.
  
- **北 요원, 키리바시·세이셸 여권으로 활동(8/22, 연합뉴스)**
  - 북한 요원들이 남태평양의 키리바시와 인도양의 세이셸에서 여권을 발급받아 홍콩에서 5년여 간 불법 무기거래회사를 운영했다고 일본인 대북(對北) 인권운동가가 주장했다고 22일 연합뉴스가 전함.
  -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일본 대북인권운동가인 가토 켄(加藤健)은 홍콩 당국에 등록된 기업 서류에서 북한 요원들이 키리바시와 세이셸 여권을 소지한 채 활동한 증거를 확인함.
  - 가토가 확인한 홍콩 기업등기처 서류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 홍콩에서 미얀마에 군사 기술을 불법으로 수출하는 위장기업(front company·정보기관이나 범죄조직 등이 운영하는 회사)인 '뉴 이스트 인터내셔널'(New East International) 지점을 개설함.
  
- **日요리사, TV서 김정은과 찍은 사진 공개(8/23, 연합뉴스)**
  - 최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만난 일본인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藤本健二, 가명)씨가 22일 밤 일본 민영방송 TBS에 출연, 김 제1위원장이 자신을 위해 베풀어준 환영회에서 벌어진 일 등을 소개하고 사진 8장을 공개함.
  - 김정은은 지난달 21일 방북한 후지모토씨를 위해 환영회를 열어주는 자리에서 "대장 동지, 배신자가 돌아왔습니다"라고 하자 김정은은 "됐어, 됐어. 배신은 다 잊었어. (어릴 때) 같이 테니스, 농구를 해줘서 고맙다. 함께 담배 피운 것도 잊을 수 없다"며 "앞으로 일본과 북한을 왔다 갔다 해도 좋다"고 말했다고 후지모토씨는 소개함.
  
- **北 "김영남이 이란 비동맹회의 참석" 발표(8/2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3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비동맹운동(NAM) 정상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이란을 방문할 것이라고 23일 조선중앙통신이 공식 발표함.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영남이 곧 테헤란에서 진행되는 제16차 뿔럭불가담(비동맹)국가 수뇌자(정상)회의에 참가하고 이란 대통령 마흐무드 아마디네자드의 초청에 의해 이란을 공식 친선 방문하게 된다"고 전함.



- 유럽 구호단체들, 北 수해 지원 나서(8/23, 미국의소리(VOA))
  - 유럽의 구호단체들이 최근 태풍과 홍수 등으로 수해를 입은 북한 주민 지원에 적극 나섰다고 23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함.
  - 이에 따르면 독일에 본부를 둔 '저먼 애그로 액션'은 평안북도 운산군, 향산군, 구장군의 730가구에 시멘트와 공구를 지원하기로 함.
  
- 日, 유골수습 민간인 5명 방북 허용(8/23,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이래 북한 지역에서 사망한 일본인 유골을 수습하기 위해 민간인 5명의 방북을 특례로 허가할 방침이라고 일본 정부 소식통들이 23일 연합뉴스가 전함.
  - 이들 소식통에 따르면 민간단체인 '전국청진회'(全國淸津會) 회원들은 오는 28일부터 열흘 정도 일정으로 평양을 비롯한 북한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 스위스, 北 수해복구에 21만 달러 지원(8/24, 미국의소리(VOA))
  - 스위스가 북한에 대한 수해복구 비용으로 21만달러를 책정하고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2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함.
  - 방송에 따르면 스위스개발협력처(SDC)는 북한 내 긴급 수해복구 작업을 위해 20만 스위스 프랑(약 20만9천 달러)을 배정했다고 지난 22일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함.
  - SDC는 이번 지원금으로 평안북도 구장군 지역의 무너진 가옥과 개인 텃밭을 복구하고 평안남도 안주시에서는 양수장을 복구해 깨끗한 식수를 공급할 계획임.
  
- 北, 日에 유골반환회담 수준 격하 요구(8/24, 교도통신)
  - 북한이 일본과 이달 하순 일본인 유골 반환 문제를 놓고 여는 예비회담 수준을 하위 직급으로 낮추자고 일본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24일 교도통신이 전함.
  -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 북한이 외교 채널을 통해 당초 국장급 협의로 예상되던 이번 회담에 과장급을 파견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함.

#### ■ 기타 (대외 일반)

- 北 외무성(박의춘 연설), 8.22 駐北 캄보디아·베트남·라오스 등 대사 초청下 '아세안 창립 45돌 연회' 개최(8.22,중통)
- 김영남 상임위원장, '제16차 불룩불가담회의(NAM/8.26~31/테헤란) 참석 및 이란 공식친선방문 예정' 보도(8.23,중통)
  - 김영남, 8.22 駐北 이집트 대사와 離任 담화(8.22,중통)
  - 박의춘 외무상, 8.22 駐北 이란·피지 대사와 각각 담화(8.22,중통)
- 美-日 공동군사훈련(8.21~9월 하순) 비난(8.27,중방)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 日 6자대표, 中에 북·일 회담 배경 설명(8/21,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20일(현지시간) 중국 측에 이달 말에 열리는 북한·일본 대화의 배경과 취지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수의 일본 당국자들에 따르면 북핵 6자회담의 일본 대표인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4년 만에 재개되는 북·일 정부 간 대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음.
- 스기야마 국장은 이날 통화에서 이번 대화가 1970,80년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와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한 뒤 중국 측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음. 그는 지난주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영도를 둘러싼 양국 간 영유권 갈등이 불거지면서 이를 취소했음.
- 스기야마 국장은 또 오는 22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을 만나 북·일 대화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지난 17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 보도했음. 북한과 일본은 지난 9~10일 10년 만에 적십자사 회담을 연 데 이어 오는 29일에는 일본인 유골 반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예비회담을 재개하기로 했음.

##### ● 美 "김정은, 6자회담 복귀해야"(8/23,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22일(현지시간)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경수로 건설의 핵심단계를 완성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온 가운데 북한 정권의 국제 의무 준수를 거듭 촉구했음.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언론 보도로 북한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바뀌지는 않는다"면서 "북한은 해야 할 선택이 있다"고 말했음.
- 눌런드 대변인은 특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해 "우리는 북한의 새 지도자가 국제의무를 준수하고 국제사회의 우려 사항을 다룰 6자회담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는 변한 게 없다"며 "북한이 지난 2005년 성명(9·19 공동성명)은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부여한 의무를 지키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음. 그는 '영변 핵시설 건설 보도로 우려가 커지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우리의 우려는 충분히 높은 상태이며, 지금도 같다"면서 "북한은 그들에게 부여된 국제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음.



- 이에 앞서 영국의 군사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지난 21일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영변 핵시설의 원자로 건물 꼭대기에 돔이 씩뚱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경수로 건설의 핵심 단계를 완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음.
- 한편 놀런드 대변인은 한국의 이란산 원유 도입 재개에 대한 질문에 "관련국들과 이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음. 그는 "국방수권법은 국무장관에게 일부 국가에 대해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면서 "이 예외 조항은 180일 이후에 갱신돼야 한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우리는 이들 (예외인정) 국가가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를 바라고, 180일 후에 예외를 다시 검토할 때 그동안의 동향을 전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들 국가와 계속 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 "한국, 중국 등 예외 인정 국가들과 관련한 특별한 우려가 있느냐는 질문에 "여기서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음.

#### 나. 미·북 관계

##### ● 北외무성 "을지연습, 美의 노골적 군사 도발"(8/20, 연합뉴스)

- 북한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침략전쟁연습'이라고 규정하며 미국을 비난했음. 북한 외무성은 UFG 연습 첫날인 20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공화국을 노린 침략전쟁 연습"이라며 "미국이 대규모 북침전쟁 연습을 벌여놓은 것은 노골적인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음.
- 담화는 "현실은 전쟁억제력을 물리적으로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핵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한 우리의 결심이 천백번 옳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것(전쟁억제력)은 자주권을 수호하는 만능의 보검이고 우리(북한)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담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며 "침략자들의 선봉질에 섬멸적 반타격을 안기고 조국통일대전으로 이어나가려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한 의지"라고 위협했음.

##### ● 美 "을지연습은 연례 훈련...北 위협 삼가야"(8/20,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20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의 연합 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대해 북한의 위협적인 성명을 삼갈 것을 촉구했음. 빅토리아 놀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UFG 연습은 '통상적인 일정(routine)'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북한의 이런 위협도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고 논평했음. 특히 놀런드 대변인은 "그렇지만 북한에 대해 그런 호전적인 성명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최근 한국·미국·일본의 대북 군사훈련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질문에 "국방부에 문의하는 게 좋겠다"면서도 "훈련 일정은 아주 정상적



이고,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정례적인 활동"이라고 거듭 지적했음.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공화국을 노린 침략전쟁 연습"이라며 "미국이 대규모 북침전쟁 연습을 벌여놓은 것은 노골적인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했음.

- 이어 놀런드 대변인은 최근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외교분쟁에 대해서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내가 여러 차례 같은 메시지를 밝혔다"면서 "도발이 아닌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이밖에 그는 일본 외무성이 다음 달 정기인사에서 한국과 미국, 중국 등 주요국 대사를 일제히 교체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는 통상적인 보직순환(normal rotation) 차원"이라면서 "이 문제는 일본 정부에 문의해 달라"고 덧붙였음.

● [브리핑] 미국, 북한인권법 2017년까지 연장(8/20, 중앙일보)

- 미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인권법'을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재승인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음. 연장 법안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에도 북한 내 인권 및 인도주의적 상황은 여전히 참담한 상태"라고 지적했음. 북한인권법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인 2004년 10월 제정돼 2008년 4년 더 연장됐음.

다. 중·북 관계

● 北장성택, 방중서 베이다이허 회의 결과 탐색(8/20, 연합뉴스)

-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노동당 행정부장은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의 방중기간 제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8차 당대회)에서의 권력교체를 조율하기위해 열렸던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 결과를 탐색하기위해 노력했을 것이라 관측이 제기됨. 부위원장은 특히 17일 있었던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이들의 발언중에서 중국 정치변화의 단서를 찾으려고 시도했을 것이라고 미국에 서버를 둔 화교 사이트 뒤웨이(多維)가 최근 보도함.
- 중국중 지도부는 그러나 장 부위원장 방중의 정치적 함의를 희석시키고 양국간 경제합작 문제만을 부각시키면서 18차 당 대회 인사문제에 대해 선 언급을 회피했을 것이라 관측임. 장 부위원장이 베이다이허 회의가 끝난 시점에 맞춰 대규모 대표단을 이끌고 방중한 것은 경제 합작문제뿐 아니라 중국 측으로부터 중요 정치적 정보를 얻으려는 정치적 함의가 있다는 것임.
-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 등으로 인해 중국과 갈등과 화해협력을 반복해왔기 때문에 중국 지도층의 인사로 미뤄 중국의 대북한 정책을 미리 점치려 한다는 것임. 중국 학계에서는 북한에 대한 무상원조가 북한에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의견이 통일돼있



지 않고 중국이 대북한 정책을 조정해야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 장 부위원장의 방중의 주요 목적중의 하나는 중국이 18차 당 대회 이전에 북·중 양국 간 갈등과 쟁론을 끝내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인지를 알아보는데 있다고 베이징의 관측통들은 말함.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한과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나 북한의 1,2차 핵실험 때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는 격한 반응을 보이며 북한에 제재를 가하는 국제사회의 조치에 동참해왔음.

#### ● "김정은, 내달 訪中 추진(8/25, 조선일보)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다음 달 중국 방문을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24일 '북·중 양국에 연계가 있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음. 국민 방문 형식이 될 김정은의 방중은 중국 지도부와의 '얼굴 익히기' 성격이며, 장성택 당 행정부장이 최근 중국을 찾은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김정은의 방중 준비였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김정은 방중 임박설(說)은 지난달부터 제기되기 시작했음.

#### 라. 일·북 관계

##### ● 北, 日에 유골반환회담 수준 격하 요구(8/24, 연합뉴스)

- 북한이 일본과 이달 하순 일본인 유골 반환 문제를 놓고 여는 예비회담 수준을 하위 직급으로 낮추자고 일본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 북한이 외교 채널을 통해 당초 국장급 협의로 예상되던 이번 회담에 과장급을 파견할 것을 요구했다고 24일 보도했음. 앞서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9일 유골 반환 문제와 관련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과 예비회담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음.
- 양국 정부 간 대화는 지난 2008년 8월 일본인 납북자 문제 협의 이후 4년 만임. 일본 정부는 2008년 협의와 마찬가지로 이번 회담이 국장급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참가한다는 방침이었음. 북한에서는 송일호 북일 교섭담당 대사가 참여할 것으로 당초 전망됐음. 이번 대화를 실무자 수준에서 개최하려는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대한 진전을 꺼리는 태도를 보여준다고 일본 정부 소식통들은 말했음.

#### 마. 러·북 관계

##### ● 北, 러, 극동 아무르주에 문화원 개설 추진(8/20, 연합뉴스)

- 북한이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州)의 주도 블라고베셴스크에 식당이 딸린 문화원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19일(현지시간) 극동지역 통신사 '포르트아무르'에 따르면 이날 블라고베셴스크를 방문한 북한 외무성 대표단이 올렉 코제야코 아무르주 주지사 등 주정부 관계자들과의 회담에서 문화원 개설 문제를 협의함.



- 북한 외무성 제3아주국장 림청일은 회담에서 식당 및 문화원 개설 문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8월 아무르주를 방문했을 때 논의됐음을 상기시키면서 "우리는 이 계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함. 림 국장은 그러면서 이 계획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함. 이에 코제마코 주지사는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며 "(북한과의) 모든 합의가 반드시 이행될 것"이라고 화답함.
- 통신은 현재 러시아 측은 문화원 건설을 위한 부지를 물색 중이며 북한 측은 건물 내부 설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함. 양측은 새 건물이 들어서기 전까지 옛 러시아군 복지 시설에 북한 식당과 문화원을 임시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 이밖에 양측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아무르주로 추가 파견하는 문제도 협의함. 북한 측은 목재가공분야와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일할 노동자들을 더 파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짐. 통신에 따르면 현재 아무르주에서는 약 300명의 북한 노동자가 농업분야에서, 비슷한 수의 노동자가 건설 분야에서 일하고 있음.

#### ● 러시아 나홋카서 북한문화제 개막(8/21, 연합뉴스)

- 북한은 20일 해방 67주년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기념해 러시아 극동 나홋카에서 문화제를 개막했음. 북한은 이날 러시아 주재 북한총영사관이 있는 나홋카에서 열린 문화제에서 그림과 응용미술품,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작품들을 선보였음.
- 또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기록영화도 상영됐음. 김정은은 이 영화에서 부인 리설주와 함께 군중앞에 나타났음. 리설주는 무릎길이의 검은색 스커트와 녹색 블라우스를 입고 하이힐 차림이었음. 심국연 나홋카주재 북한 총영사와 올레그 콜야딘 나홋카 시장은 개막식에서 차사를 통해 북-러 양국은 따뜻하고 우호적인 친선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런 관계가 다른 분야에서도 계속 발전할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했음.

#### 바. 기 타

#### ● 김정은, UFG연습에 "전면적 반공격작전 서명" 위협(8/26, 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과 관련해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다"며 "전면적 반공격전을 위한 작전계획을 검토하고 최종수표(서명)했다"고 말했음.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 마련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혁명 영도 개시 52주년 '8·25 경축연회'에 부인 리설주와 함께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연설을 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8일 중앙통신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2010년 연평도 포격을 주도했던 서해 최남단의 장재도·무도 방어대 시찰에서 "침략자들이 전쟁을 강요한다면 서해를 적들의 최후무덤으로 만들라"며 이같이 명령했다고 보도했음.



- 그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인 UFG 연습에 대해 "지금 미국과 남조선 괴뢰군은 우리를 겨냥한 대규모 침략전쟁 연습을 벌여놓고 우리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다"며 "나의 명령을 받은 인민군 장병들은 무모한 전쟁도발 책동에 대처해 전투진지를 차지하고 결전을 위한 최후 돌격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의 광기 어린 침략책동을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며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추태의 후과로 이 땅에서 또 다시 바라지 않는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전쟁에서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은 수치스러운 파멸을 맞을 것"이라고 위협했음.
- 한편 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제1위원장이 동부전선 시찰의 길에서 8·25 경축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했음. 김 제1위원장의 이번 공연 관람은 부인 리설주와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현영철 군 총참모장, 김경희 당비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정각 인민무력부장, 현철해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 김창섭 국가안전보위부 정치국장 등이 수행했음. 북한은 지난 2005년부터 김정일 위원장이 1960년 8월25일 김일성 주석을 따라 6·25전쟁 당시 서울에 처음 입성한 105전차사단을 방문한 것을 '선군혁명 영도'의 시작이라고 선전하고 있음.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 한미, UFG 연습 2주간 장정 돌입(8/20, 연합뉴스)

- 한국군과 미군 8만여 명이 참가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20일부터 2주간의 일정으로 시작됨.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주관하는 UFG 연습은 한반도의 안전보장과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연례 지휘소 연습임.
- 미군 측에선 외국에서 활동 중인 병력 3천여 명을 포함해 3만여 명이, 한국군에선 군단과 합대사, 비행단급 이상 5만6천여 명이 각각 참여함. 유엔에서 파견된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등 7개국 요원들도 참관하며,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스위스, 스웨덴 요원들도 연습을 지켜보며 정전협정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임.
- 한미연합사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UFG 연습은 다른 한미연합사의 연습과 마찬가지로 전투 준비태세와 억제력, 그리고 대한민국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함.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미 양국군의 전투태세를 강화하는 핵심적인 연습으로 실전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여 범정부적 접근 방법을 통해 우리의 필수 과업에 숙달할 수 있게 해준다."고 강조함.
- 이번 UFG 연습은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연합사의 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27'이 마지막으로 적용돼 진행됨. 내년부터는 한국군이 연습을 주관 하기 때문에 한미 군당국이 새롭게 수립한 '공동작전계획'(작계 5015)이 적용됨. 정부 연습인 을지연습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3천 500여 개 기관에서 41만여 명이 참가하며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테러 대비와 재해재난 관련 대피훈련 등 국민 참여 형으로 시행됨.

- 한편, 북한의 대남단체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민족화해협의회는 전날 합동성명을 통해 UFG 연습을 '북침전쟁연습'으로 규정하며 한국과 미국 정부를 맹비난함. 이들 단체는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이 감히 서툰 불질을 해댄다면 그것은 국부(국지)전쟁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며 전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그 절호의 기회를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않고 조국통일대전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주장함.

### ● <美전문가들, 한·일에 '미래지향' 촉구>(8/20, 연합뉴스)

-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으로 촉발된 한국과 일본의 외교 갈등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과거사를 극복하고 미래를 지향할 것을 촉구함. 이들은 "외국의 영토분쟁에 대해선 어느 편도 들지 않는다."는 미국 정부의 방침과 큰 틀에서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한·일 관계가 감정싸움에 매몰돼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함. 그러나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일간 미묘한 과거사 문제를 미국 관점에서 바라보는 데 따른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도 내놓음.
-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한국과 일본은 과거를 잊지 않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면서 "양국 지도자들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국수주의를 거부하고, 일부 개인의 주장이 국가정책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함. 그는 특히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양국은 정책결정을 하는 데 있어 결코 과거사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함. 이어 그는 "양국의 국내 정치와 외교정책이 과거사·영토 문제에 계속 휘말리고 있지만 행정부와 의회 지도자들은 분쟁을 극복하고 정책결정에서 이 문제를 분리해야 한다"면서 최근 논란이 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의 조속한 체결을 주장함.
- 미국 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 연구원은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작은 생각(small think)'이라면서 직접적으로 비판함. 그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및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 녹색 성장, '글로벌 코리아' 등을 언급한 뒤 "이는 한국의 국제위상을 높이고 영향력을 확대했다"면서 이 대통령의 '큰 생각(big think)'이라고 평가함. 그는 그러나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과거사 비판은 '작은 생각'을 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한국의 광범위한 지역적, 세계적 이익을 훼손하면서 하나의 제한적인 이슈를 균형



에 맞지 않게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함.

- 피터슨연구소의 마커스 놀런드 연구원도 "독도란 단어는 한국에서 선거일정에 맞춰 신문의 1면을 장식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모든 정파는 여론을 자극하기 위해 독도 이슈를 이용한다."고 말함. 그는 "이런 측면에서 재선에 도전하지 않는 이 대통령의 행동에 놀랐고, 왜 그가 독도 카드를 꺼냈는지 불명확하다"며 "한·일 양국은 그들의 힘을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쏟아야 한다."고 강조함.
- 이들의 견해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두 동맹(한국과 일본)은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양국 간 역사적 견해차를 부활시키고 국수주의적 감정을 이용하려는 유혹을 떨쳐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비슷한 맥락임.
-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한국 국민은 자유롭게 한국 영토를 방문할 수 있고, 이는 다른 나라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고 옹호함. 그는 다만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충분히 예상된 것"이라서 "나아가 일왕에 대한 사과 요구는 양국의 이성적인 관계를 힘들게 만들었다"고 진단함. 그러면서 "한국은 세계 15위 경제 강국으로 일본에 대한 투자와 무역으로 많은 이익을 얻고 있고, 과거 금융위기 극복에도 일본의 기여가 있다."면서 "또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 예측하기가 힘들다"고 지적한 뒤 "한국은 일본과의 좋은 관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임.
- 워싱턴DC 외교 소식통은 "미국 조야에서는 동북아 문제를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위협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동맹인 한·일 양국의 협력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함.

### ● 한미, 내달 '원자력 실무협약' 개최키로(8/21, 연합뉴스)

- 한미 양국은 원자력 분야 협력방안과 관련된 실무협약을 내달 미국에서 개최하기로 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번 실무협약에는 우리 측에서 김건 외교통상부 한미 원자력협정 태스크포스(TF) 팀장이, 미국 측에서 국무부 원자력 분야 핵심인사들이 참여함. 특히 현재 담보상황인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에 대한 의견조율이 시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김건 팀장을 단장으로 한국 협상단은 지난 2월 워싱턴DC에서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비확산및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을 만나 2014년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 협정개정 문제를 집중 협의했으나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음. 정부 소식통은 20일 "양국의 원자력 분야 협력을 위한 실무 협의를 위해 9월중 시애틀 등에서 회의를 할 계획을 잡고 있으나 장소와 구체적인 일자 확정 등 세부사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음. 앞서 양국은 지난해 12월 박노벽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 전담대사와 아인혼 특별보좌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진행했음. 특히 양측은 각각 마련한 협정 개정문 초안에 대한 협의를 하면서 ▲원자력 기술개발 문제 ▲신학협력 ▲안전조치 ▲수출 원활화 등의 분야 가운데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음.

- 이와관련,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최근 "재처리에 대해 미국도 절대 안된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한국의) 변화된 상황을 감안해 우리의 요구를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음. 또 게리 세이모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량살상무기(WMD) 조정관도 지난달 워싱턴DC에서 한국기자들에게 "워싱턴과 서울에 있는 모든 관계자들이 평화적인 핵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이 이슈에서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음.
- 1974년 발효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2014년까지 유효하며, 한미 양국은 그 전에 협정개정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협상중임. 현재 한국은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국제적인 핵 비확산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온적임. 특히 한미 양국 모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를 조기에 타결지을 수 있을 지 불투명한 상황임.

#### 나. 한·중 관계

##### ● 주한中대사 "북중 경제협력, 한반도 안정에 도움"(8/20, 연합뉴스)

- 장신썬(張愼<金 3개>森) 주한 중국대사는 20일 북한과 중국의 경제 협력은 북한의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 촉진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도움이 되며 관련 당사국의 공통된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힘.
- 장 대사는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연합뉴스와 가진 서면인터뷰에서 '김정은 체제' 출범 후 최근의 북중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함. 이런 언급은 최근 방중한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 지도부와 잇따라 만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나온 것임. 장 대사는 "중국은 남북한이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지속적으로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그는 "중국은 시종일관 남북한이 한반도의 중요한 당사국이며 대화와 협상이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평화를 실현하는 유일하고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함.
- 특히 장 대사는 올해 북한인권가 김영환씨 고문 파동 등 양국 간 민감한 현안이 발생한 것과 관련, "양국 간에는 우호와 협력이 시종일관 주류였다"고 전제하면서 "앞으로도 상호 존중과 호혜 공영의 정신을 견지한다면 걸림돌을 제거하고 양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그는 몇 년째 교착상태에 놓인 6자회담과 관련해서는 9.19 공동성명의 합의 사항과 6자회담의 유용성을 강조하면서 "유관 당사국들이 믿음과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화해와 대화 및 회담 프로세스의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함.
- 또 수교 20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를 "씩에서 거목으로 성장한 것"이라고



비유하면서 "한중 수교는 선견지명을 가진 양국 지도자들이 내린 역사적으로 정확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함. 장 대사는 지난 20년간 한중 양국은 정치적 상호 신뢰가 깊어지고 경제 협력이 나날이 심화되며 인적 교류가 크게 늘어났으며 지역(동북아) 및 국제무대에서의 다각적인 협력도 강화되는 등 국가 대 국가 사이에서 유례없이 빠른 관계 발전을 이룩했다고 강조함. 그는 "양국 관계의 빠른 발전은 양국민 사이의 우의라는 기초 위에서 가능했다"면서 향후 발전의 근본 동력도 양국민 사이의 우의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함.

- 장 대사는 지난 5월 공식 개시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 "FTA가 양국 관계 발전에 새롭고 강한 동력이 되는 동시에 (동북아) 지역의 경제 협력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기대감을 피력함. 그는 앞으로 더욱 바람직한 한중 관계를 위해 ▲더욱 밀접한 고위급 교류와 왕래 ▲경제 협력의 지속적인 심화 ▲인적 문화적 교류의 확대 ▲국제 및 지역문제에서의 협력 강화 ▲서로 간 중요 관심사의 존중을 통한 문제점(마찰)의 적절한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함.
- 장 대사는 한중 양국의 미래에 대해서도 강한 기대감을 드러냄. 그는 "양국이 함께 노력해 양국 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켜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강조함.

#### ● 中매체 "韓 소극적 태도로 한중 FTA 진전 더뎠다"(8/23, 연합뉴스)

- 중국의 관영 영자지인 차이나데일리(China Daily)가 23일 "한국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 진전이 예상보다 더디다"고 보도했음. 신문은 이날 유력한 회담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소식통은 "목표 기한을 2년으로 잡은 건 너무 낙관적이며 그 기간에 협정문에 서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음. 이런 보도는 지난 22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에서 한·중 FTA 3차 협상이 개최 중인 가운데 나와 관심을 끌음. 특히 중국 정부는 국제관계상 꺾이지 않는 애기를 관영 매체를 통해 드러내 왔다는 점에서 차이나데일리의 이번 보도가 주목됨.
-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소의 휘젠궈 원장은 차이나데일리에 "한·중 FTA는 양국은 물론 동북아시아 지역 전체에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하면서 협상에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음. 중국 과학원의 장원링 위원은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음. 신문은 한국 측이 농업, 서비스, 제조업 분야를, 중국측이 화학, 전자, 자동차 분야를 민감분야로 정하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 한중 양국은 지난 5월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陳德鎰) 상무부장 간 서명으로 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음. 그러고서 베이징과 서울에서 두 차례 협상이 열렸음. 양국은 지난 2차 협상에서 FTA 양허에서 제외하거나 관세를 부분적으로 감축할 민감품목의 범위에 대



해 의견을 나눴음. 3차 협상에서는 지적재산권, 전자 상거래, 정부 조달 품목 등과 관련해 논의함.

● **일자바오 "中·韓관계 진일보 추진"(8/23, 연합뉴스)**

-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중국은 한국과 함께 양국관계의 내용이 더 풍부해지고 중·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진일보 발전하도록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외교통상부가 23일 밝혔다. 원 총리는 한·중 수교 20주년(24일)을 맞아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보낸 축전에서 "양국 교류를 강화하고 협력을 심화하는 것은 대세의 흐름이자 민심이 지향하는 바이며 양국 공동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원 총리는 "중·한 양국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이웃 나라로서 양국 국민간 우호와 교류의 역사는 유구하다"면서 "수교 이래 양국의 공동 노력으로 양국 관계는 전면적이고 신속한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음.
- 이와 함께 "정치적 상호 신뢰를 부단히 심화시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했고 경제·무역 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며 인적 교류는 날로 긴밀해졌다"면서 "양국은 국제 및 지역 무대에서도 양호한 소통과 조율을 유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부장도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보낸 축전에서 "수교 20년 이래 각 분야 교류와 협력은 양호한 발전을 이룩하고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면서 "양국은 좋은 이웃이자 좋은 친구, 좋은 동반자"라고 밝혔다.

● **'한·중 수교 20주년' 中선양 한국週 개막(8/24, 연합뉴스)**

-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제11회 선양(瀋陽) 한국주' 행사가 24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에서 개막됐음. 주선양 한국총영사관과 선양시 정부가 공동 주최한 올해 한국주 행사에서는 수교 20주년을 맞아 양국 간 우의를 다지기 위한 다양한 공연과 전시회, 체육행사가 진행됨. 이날 개막식에는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장관급)과 김석수 전 국무총리, 조백상 선양총영사, 쟁웨이(曾維) 선양시 당서기, 천하이보(陳海波) 선양시장 등 양측 고위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 했음.
- 박 본부장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한·중 양국은 지난 20년 간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빠르고 조화롭게 발전해왔다"면서 "상호 호혜라는 전제 아래 추진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간 경제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키고, 이를 통해 앞으로 전개될 동북아 경제통합 과정에서 한·중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이어 "앞으로 한국 중앙정부와 랴오닝성, 선양시 정부와의 관계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선양 한국주 행사에서는 성남시예술단, 평택시태권도시범단, 대전시예술단, 김천문화원예술단 등이 각종 공연을 통해 한국의 멋과 문화를 중국 현지에 선보임. 또 등반대회, 축구대회, 테니스대회, 걷기대회, 씨름대회 등 생활체육 교류와 한·중 영화제, 한식 세계화축제, 바자회 등이 부대행사로 진행됨. 행사 기간에는 코트라가



주관하는 자동차 부품 전시회도 열려 중국 동북지역의 새로운 '자동차 메카'로 떠오르는 선양과의 경제 협력 폭을 넓힐 계획임.

- 선양 총영사관과 선양시는 한·중 간 교류 확대를 위해 지난 2002년 중국에서 처음으로 한국주 행사를 개최한 이래 해마다 이 행사를 열고 있음. 2010년에는 1천200여명의 한상(韓商)이 참가한 가운데 해외에서 처음 개최된 한상대회인 '중국 글로벌 한상대회'를 열어 좋은 평가를 받았음.

#### 다. 한·일 관계

##### ● <“한국채 매입 중단” 日 발언은 ‘단순 업포용’>(8/20, 연합뉴스)

- 일본이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실제 영향은 거의 없어 보임. 따라서 통화스와프(외화자금 부족으로 양국 통화를 바꿔 쓰는 협약) 규모를 줄이거나 국채매입 중단을 검토하겠다는 일본 각료들의 발언은 단순히 업포용으로 그칠 공산이 커짐. 이들의 발언은 독도 문제로 조성된 일본 내 반한(反韓) 감정을 의식한 정치적 반응일 뿐 실제로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임.
- 금융감독원은 일본 정부가 국채매입 중단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현재 일본 정부가 보유한 우리나라 국채는 없다고 20일 밝힘. 정부가 아닌 민간 금융회사 등은 우리나라 채권을 5천50억 원 들고 있음. 이 가운데 국고채는 약 90%인 4천500억 원 정도임. 전체 외국인 채권 투자액 87조원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채권시장에서 차지하는 일본 비중은 0.6%에 불과함.
-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 황성운 팀장은 "일본의 한국 채권투자는 특별한 추세도 보이지 않다."며 "금액이 워낙 미미해 '별도 관리 대상'도 아니다"고 전함. 국제금융센터 손영환 연구원은 "정부가 민간을 규제하기도 어렵고, (한·일 관계 악화는) 일본계 민간 자금이 빠져나갈 만한 충분한 유인이 아니다"고 진단함. 한·일 통화스와프도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님.
- 양국은 지난해 10월 통화스와프 규모를 13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로 늘렸지만, 실제로 사용한 스와프 자금은 없음. 일본 정부가 통화스와프 규모 축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난 16~17일 원·달러 환율은 4.7원 오르는 데 그침.
- 일본의 업포성 발언에서 굳이 의미를 찾자면 양국 정부 간 '국채투자 정보공유'가 파기되는 정도임. 이마저도 일본의 '자충수'가 될 수 있음. 삼성경제연구소 정영식 수석연구원은 "한·중·일 아시아 금융협력 구도가 한·중 중심으로 재편돼 스스로 영향력을 제한시키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함.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의 국채 매입 중단을 오히려 반겨야 할 처지라는 분석마저 나옴. 일본 자금이 들어오면 원화는 강세를 띠고 상대적으로 엔화는 약세를 나타냄. 우리나라 수출에 타격을 주고, 일본



수출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상황이 조성되는 셈임.

- 대우증권 윤여삼 수석연구원은 "우리 정부는 환율하락 압력이 커져 급격한 자금 유입을 원치 않는 상황이다"며 최근 발언은 일본이 한국 수출을 돕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엔화표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사무라이본드'가 일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게 염두에 둘 일은 아니라는 견해가 많음. 윤 연구원은 "국외 자금조달은 주로 달러표시 채권이다"며 "자금조달 창구에 일부 제약이 생길 순 있지만,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해 부담은 적다"고 분석함. 그러나 정영식 연구원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외화유동성 추가 확보 등으로 일본과의 경제 거래에서 발생할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며 경계론을 펴.

### ● <정부 '日 제소제안' 일축..과도대응 자제>(8/21, 연합뉴스)

- 정부는 21일 일본이 각료회의에서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제안을 공식 결정하고 구상서를 전달해온 것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단호한 태도를 거듭 밝혔음.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독도는 고유영토로 영토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일본의 ICJ 제소 제안과 한일간 분쟁해결 공문에 의한 조정 요구를 모두 일축했음. 김성환 외교부 장관도 국회 외통위에서 "영토·역사문제에 대해서 일본과 타협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정부는 앞서 지난 17일 일본이 구두로 ICJ 제소 제안을 통보했을 때도 "일본의 여하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천명하면서 일본의 제안을 즉각 거부했음. 다만 정부는 일본의 도발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해서는 여러 상황을 감안해 수위 조절을 계속했음. 일본의 ICJ 제소 제안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는 것 외에 일본을 겨냥한 공세도 자제하는 모습임. 이런 태도는 독도의 분쟁지역화 방지 필요성에 따라 과도한 대응은 피한다는 기존 방침에 따른 것임. 일본의 도발에 우리가 강경조치로 맞대응하면 독도를 분쟁지역화해 ICJ 등 국제무대로 가져가려는 일본의 전략에 말릴 수 있다는 판단인 셈임. 정부가 지난 17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의 유감 서한을 즉각 반박하지 않거나 15일 일부 일본 각료의 아스쿠니(靖國) 신사 참배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은 것도 이런 맥락임. 여기에는 악화된 한일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뜻도 반영된 것으로 보임. 외교부가 이날 국회 외통위에 앞으로 일본과 "역사를 직시한 가운데 미래 지향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기본 방침을 견지할 예정이라고 보고한 것도 같은 맥락임.
- 이와 관련, 외교가 일각에는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 정부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취한 것을 놓고 정부의 대응 시나리오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음.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에 따른 외교적 대비가 안돼 체계적인 대응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것임. 이에 대해 외교부는 "원칙에 입각해 필요한 행동을 한 것"이라면서 "정부는 가장 최선의 방





- 에 회부하자고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은 1954년과 1962년 이후 50년 만임. 주한 일본대사관의 오쓰키 고타로 참사관은 이날 오후 4시54분께 외교통상부 청사를 방문, 이러한 내용의 구상서를 전달했음. 굳은 표정으로 청사에 도착한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동북아국으로 올라가 최봉규 동북아 1과장에게 구상서를 전달하고 10분만에 청사를 빠져나갔음. 오오츠키 참사관은 청사를 떠나기 전 구상서를 전달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달했다"고만 짧게 답한 뒤 서둘러 청사를 나섰음.
- 구상서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측 주장과 함께 "독도가 한일 양국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곳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판단을 받아보자"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구상서에는 또 "한국이 이 제안을 못 받아들인다면 1965년 한일협정상의 교환공문에 의거해 조정을 하자"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음. 별도의 문서는 첨부되지 않은 구상서에는 일본의 기존 주장 외에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일본 외무상은 지난 17일 신각수 주일 한국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제안한 바 있음. 우리 정부는 구상서를 전달받은 만큼 조만간 외교채널을 통해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의 제안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취지의 단호한 입장을 전달할 예정임.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교공한(구상서)을 받게 되면 우리도 외교공한을 통해 우리의 기존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말했음. 우리 정부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제소 제안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며 일본이 거론한 조정절차 역시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음.
  - 그러나 일본은 우리 정부가 ICJ 제소와 조정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단독 제소를 검토하기로 했음. 일본은 이날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독도 문제 관련 각료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음. 이날 회의에서 일본은 한일간 장·차관 등 각료급 접촉 중단, 이달 말로 예정된 '동남아국가연합(ASEAN)+한중일' 경제장관회의에서의 양자회담 유보 등 외에 구체적 보복조치는 확정 짓지 않았음.

#### ● 日 외상 망언.. "한국이 독도 불법 점거"(8/22, 연합뉴스)

- 일본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이 22일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음. 겐바 외무상은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독도 문제에 언급, "한국에 의해 일본 영토의 관할권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면서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라고 말해도 좋으며, 오늘부터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쓰겠다"고 말했음.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불법 상륙"이라고 겐바 외무상은 주장했다.
-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과거 자민당 정권 때 종종



사용됐지만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뒤 외무상이 공식석상에서 이같은 언사를 구사한 적은 없었음. 그는 러시아와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쿠릴 열도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영토 문제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앞으로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음. 외무성은 일본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관을 대상으로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는 설명회를 열기로 했음. 이를 통해 외무성은 한국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한 배경을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할 예정임.

- 한편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겐바 외무상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대응조치와 관련, "한국이 미래지향적 입장에서 사려깊게 행동하는지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음. 이는 독도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보복조치의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됨.
- 겐바 외무상은 다음 달 러시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의 한일 정상회담 유보와 정상 간 셔틀외교 중단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혀 대화의 여지를 남겼음. 그는 오는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북한과의 일본인 유골 반환과 관련한 정부 간 교섭의 의제에 대해 "일본인 납치자 문제도 당연히 포함된다"면서 "납치자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음. 또 추가 교섭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여러 차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음.

### ● **日언론, 독도 표기 '시마네현 다케시마'로 변경(8/22, 연합뉴스)**

- 일본의 주요 매체 사이에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독도를 '시마네(島根)현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22일 연합뉴스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검색해 확인한 결과, 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지난 10일부터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관련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시마네(島根)현 다케시마(竹島)'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음. 당일에는 '시마네현 다케시마'와 '다케시마'가 혼재했으나 이튿날인 11일 이후에는 대부분의 기사에 '시마네현 다케시마'로 표기했음. 일부 '일본 해의 다케시마'라고 적은 기사도 있음. 이 방송사는 7월31일까지는 관련 기사에서 '다케시마'나 '일한(日韓)이 영유권을 다투는 다케시마'라고 표현했음. 8월1~9일에는 독도 관련 기사가 없었음.
- NHK 이외에 요미우리신문, 마이니치신문, 도쿄신문 등 다른 주요 매체에도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시마네현 다케시마' 표기가 등장하면서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다케시마'와 혼용되고 있음. 시마네현은 지난 1905년 2월22일 현 고시로 독도를 자체 영토로 일방 편입했으며, 2005년 3월에는 '다케시마의 날'(매년 2월22일)까지 제정했음.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전에는 일본 주요 매체 가운데 보수 우익지인 산케이신문이 유일하게 '시마네현 다케시마'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음. 일본 주요 매체들이 '시마네현 다케시마'라는 '산케이식' 표기를 사용하고 나선 것은 독도가 시마네현의 부속 도서에 속한 일본 영토라는 점을 강조하



기 위한 의도로 풀이됨.

- NHK 등이 독도 표기를 바꾼 이유가 회사 내부 지침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음. NHK 홍보부 관계자는 "회사 입장에서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뉴스 표현은 기사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시마네현 다케시마'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마네현 다케시마'라는 표기가 일본 내 민족주의를 자극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음.

#### ● 日 한국과 대화 올스톱...자제론 부상(8/22, 연합뉴스)

-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에 대한 사죄 요구에 발끈한 일본이 한국과 정부 간 대화 채널을 모두 단아버렸음. 국가 간에는 전쟁 중에도 대화 채널을 열어놓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의 조치가 선진국답지 않게 감정적이고 과도하다는 지적이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음. 일본 정부는 21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열린 독도 관련 각료회의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예정된 한국과의 정부 간 대화를 모두 중단하기로 했음.
- 이에 따라 오는 25일 예정됐던 한일 재무장관 회담, 29~30일 예정된 동남아국가연합(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의 한일 양자회담도 거부하기로 했음. 이밖에 경제산업성, 총무성 등이 소관하는 각종 실무급 회의와 회담도 연기 또는 중단하기로 했음. 다음 달 5~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매개로 한 양자 간 장관급 회담도 하지 않기로 했음. 심지어 경제산업성은 다음 달 19일 도쿄에서 열기로 했던 액화천연가스(LNG) 공동 도입과 관련한 장관급 협의도 유보하기로 했음.
-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와 말을 섞기 싫다는 것으로, 지난 2010년 일본 경비선과 중국 어선이 충돌한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사태 때 중국이 일본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보복 조치에 나섰던 것과 닮은 꼴임. 일본 정부의 대화 채널 차단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에 새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냉각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 하지만 한 해 양국 국민 500만명이 오갈 정도로 민간 및 경제 협력이 왕성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대화 중단은 비정상적이라는 비판론도 부상하고 있음. 또 일본 정부 내부에도 흥분을 가리앉히고 냉정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음.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부총리는 21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 전체에 큰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한국과의 각료급 대화 중단을 언급하면서도 정상 간 셔틀외교에 대해서는 "외교 루트를 당장 폐쇄한 것은 아니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음.
- 아사히신문은 외무성 내에서 독도 관련 보복조치가 국제사회의 상식에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지사이신문



은 "한국과의 대립을 사려 분별없이 계속하는 것은 득책이 아니다"면서 "경제분야의 대응조치가 감정에 휘둘려 과격해지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음.

● **日정부, 무토 주한대사 귀임 조치(8/22, 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반발해 소환했던 주한 일본 대사를 12일 만에 한국에 귀임시켰음.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은 22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 대사를 귀임토록 했다고 밝혔음. 무토 대사는 지난 10일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항의 표시로 본국의 명령에 따라 일본으로 귀국했었음. 일본 정부가 무토 대사를 귀임 조치한 것은 한국과의 외교 관계 단절이 장기화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보임.
- 한일 외교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주한 대사를 귀임시킨 것은 한국과의 외교 소통 수준을 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음. 한편 겐바 외무상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일왕이 (한국에) 오면 사과해야 할 부분은 사과해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면서 한국 측에 항의했다고 말했음.

● **日, 외신 상대 '독도는 일본땅' 기자회견(8/22, 연합뉴스)**

-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 공동 제소 제안을 계기로 국제 사회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본격적으로 퍼뜨리기 시작했음. 일본 외무성은 22일 오후 일본 프레스센터에서 도쿄에 상주하는 외신사를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고 외무성이 제작한 '독도 문제 10문 10답' 등 자료를 배포했음. 일본이 한일 갈등이 고조된 이후 외신사를 상대로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사토 마사루(佐藤 優) 외무성 국제보도관은 이날 회견에서 16세기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나오는 '팔도총도(八道總圖)'를 복사해 나눠주며 "울릉도 서쪽에 우산도(독도)가 그려져 있는 걸 보면 한국이 생각하는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고, 한국은 역사적으로 진짜 독도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예의 주장을 되풀이했음. 사토 보도관은 한 외신사 기자가 일본이 점유한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 열도와 독도를 비교해 질문하자 "센카쿠 열도에는 영토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음.
- 이 기자가 다시 "한국도 '독도에 영토 분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이번에는 "두가지 문제는 비슷해 보이지만 배경이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음. 한국이 공동 제소 제안을 거부할 경우 압박책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국은 이제 '글로벌 코리아'를 자부할 정도의 국가가 된 만큼 당당히 제소에 응하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음. 이날 50석 규모의 회견장에는 로이터통신, 파이낸셜 타임스 등의 도쿄 주재 기자 10여명이 참석했음.



● **日, 한국의 총리 친서 반송 접수 거부(8/23, 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친서 반송을 거부했음. 한국 정부는 23일 오후 주일 한국대사관의 김기홍 참사관을 통해 친서를 돌려주려 했으나 일본 외무성이 접수를 거부했음. 주일 한국 대사관 측은 "김 참사관이 외무성을 방문해 면담을 요청했으나 일본 측이 친서 반송과 관련한 면담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다"고 밝혔다.
- 일본 외무성은 김 참사관이 탑승한 한국 대사관 차량의 정문 통과도 허용하지 않았음. 김 참사관은 오후 3시40분쯤 일본 외무성에 도착했다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1시간 만인 오후 4시40분쯤 대사관으로 복귀했음. 일본 외무성의 아마구치 쓰요시(山口壯) 부대신(차관)은 "주일 한국 대사관 담당 과장으로부터 면담 요청이 있었지만, 목적이 분명치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음. 그는 이미 총리 친서를 한국에 보낸 만큼 이를 반송받을 수는 없다고 밝혀, 외교관을 통한 직접 반송이든 우편 반송이든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음.
- 노다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한국의 친서 반송과 관련 "너무 냉정을 잃은 행위다"라고 비판했음. 후지무라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외교 관례상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불쾌감을 표시했음.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도 "외교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음.

● **〈韓-日, 이번엔 '외교적 결례' 공방〉(8/23, 연합뉴스)**

- 독도와 과거사 문제를 놓고 대립하는 한국과 일본의 갈등 양상이 진정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이번에는 양국이 일본 총리 서한을 둘러싼 '외교적 결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음. 우리 정부가 보기에 서한을 둘러싼 외교적 결례 논란의 불씨는 일본이 먼저 제공했음. 일본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에 유감을 표명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서한을 지난 17일 저녁 주일 한국대사관에 보내자마자 곧바로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을 공개했음.
- 정부 당국자들은 당시 일본의 이런 처사에 "노다 총리의 서한을 우리 정부가 접수해 내용을 확인하기도 전에 사전에 언론에 공개한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음. 정상 간의 서한을 상대국 정상이 확인하기도 전에 외부에 공개한 것은 외교적 관례를 벗어나 결례를 범했다는 것임. 우리 정부가 노다 총리의 서한을 외교채널을 통해 이르면 23일 중에 반송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자 이번에는 일본이 "외교적 결례"라고 반발하고 있음.
-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이 노다 총리의 서한을 돌려보내기로 한 데 대해 "외교 관례상 있을 수 없는 결례", "(총리 서한 반송은) 우호국 사이에선 들어본 적이 없다"는 등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음. 일본은 반송된 서한을 전달받은 이후 구두로 항의한 뒤 한국의 반응을 살필 것으로 전해졌음.



-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외교적 결례는 일본이 먼저 했다고 지적했음. 정부 당국자는 23일 "일본 역시 이번 서한 발송 과정에서 외교적 예양(예법)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면서 "결례가 된다고 해서 우리 원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음. 정부는 외교적 결례란 지적이 나오더라도 독도에 대한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음. 총리 서한을 둘러싼 양국간 '외교적 결례' 공방은 갈등 양상이 다소 누그러지는 상황에서 빚어져 양국간 감정 대립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 ● 日총리, 李대통령에 일왕 발언 사죄 요구(8/23, 연합뉴스)

-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의 일왕 사죄 요구 발언과 관련, 역으로 사죄와 발언 철회를 요구했음. 노다 총리는 2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 대통령의 일왕 사죄 요구 발언과 관련, "상당히 상식에서 이탈하고 있다"면서 "사죄와 철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일본 정부가 이 대통령의 지난 14일 일왕 관련 발언 이후 이 대통령에게 사죄를 요구한 것은 처음임.
- 노다 총리는 영토·영해 문제에 대해 "해양국가인 일본으로서는 멀리 떨어진 섬을 포함해 영토·영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영토·영해와 관련해 발생하는 사안에는 불퇴전의 결의를 갖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관련,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기회를 통해 일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독도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독도 관련 전문부서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노다 총리의 친서를 한국이 반송하기로 한 데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음. 후지무라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의 노다 총리 친서 반송 방침과 관련, "외교 관례상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불쾌감을 표시했음. 그는 "총리의 생각을 전하는 친서인 만큼 한국 정부가 확실하게 수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니혼게이지신문은 일본 외무성 당국자가 미국 고위 관료들을 만나 독도 문제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보도했음.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2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대니얼 러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과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잇따라 만났음. 스기야마 국장은 일본 취재진에게 "미국 측에 '국제법에 근거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며 "미국 측은 일반론이긴 하지만 국제 분쟁은 평화적인 수단으로, 국제법에 근거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일본의 생각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 ● <韓-日 온종일 대립각.. '정상적 외교' 실종>(8/23, 연합뉴스)

- 독도와 과거사 문제를 놓고 대립하는 한국과 일본이 23일 지도자들의 발언과 서한 반송을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정상적 외교관계가



사실상 실종돼 버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우호 관계를 맺어 온 수교국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대국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아지면서 서로에 대한 배려와 기존의 외교관행은 사라졌다는 지적도 나옴. 일각에서는 이미 양국간 갈등 수위가 상대에 대한 외교적 배려의 수준은 넘어선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했음.

◇日총리 서한 반송 놓고 온종일 대립.. '日 면담거부'→한국외교관 문전박대→등기우편 통해 반송 강행 = 양국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의 서한 반송 문제를 놓고 외교 관행상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음. 우리 정부는 23일 주일 대사관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보낸 유감 표명 서한 반송을 시도했음. 주일대사관은 노다 총리의 서한을 반송하기 위해 이날 오전부터 일본 외무성과의 접촉을 계속 시도했음. 그러나 일본은 우리의 면담 요청을 거부했음. 일본의 면담 거부가 이어지자 주일대사관은 이날 오후 일반적인 외교문서 수발 경로를 통해 일본 외무성에 노다 총리의 돌려주기 위해 외무성에 직원을 보냈음. 하지만 일본 외무성은 한국 대사관 차량의 정문 통과를 허용하지 않은 채 반송을 위해 요청한 면담 자체를 거부해 버렸음. 한일 외교 사상 초유의 외교관 문전 박대 사건이 빚어진 것임. 외무성을 찾은 김기홍 참사관은 밖에서 1시간이나 기다리다 대사관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었음. 외교관행을 벗어난 일본의 처사에 우리 정부는 등기우편이라는 흔치 않은 방법을 통해 서한 반송을 강행하는 것으로 맞받아쳤음. 오후 5시30분에서 6시 사이에 등기우편물은 발송됐음. 주일대사관은 이후 일본 외무성과 접촉, 외교관 차량의 외무성 진입조차 봉쇄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노다 총리 서한의 반송 사실을 알렸음.

- 이에 앞서 양국은 총리 서한 처리를 둘러싸고 상대국이 심각한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서로 비난했음. 일본은 노다 총리의 서한을 우리 정부가 반송기로 한데 대해 "외교적 결례"라고 비판했음. 반면 조태영 외교 통상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서한을 보내온 과정에서 보여준 결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음.

◇日총리, 이대통령 사죄요구..감정싸움에 불질러 = 노다 총리가 이날 일왕 사과 발언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사죄를 거꾸로 요구한 것은 양국간 감정 싸움에 불을 지른 격이었음. 노다 총리는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상당히 상식에서 일탈하고 있다"면서 "사죄와 철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이 대통령의 지난 14일 일왕 관련 발언 이후 이 대통령에게 사죄를 요구한 것은 처음임. 청와대는 이날 공식적인 반박을 내놓지 않았지만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음.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말 같지 않은 주장에 대꾸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음. 청와대 내부에서는 '노다 총리의 발언이 예의와 금도를 넘어섰다'면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 당국자도 노다 총리의 요구와 관련,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하나하나 대꾸하지 않겠다"고 일축했음. 수교국 정상에 사죄와 발언 철회를 요구한 것은 적대국이 아닌 정상적인 우호국 사이에서는 매



우 보기 드문 일이며, 상대국 총리의 요구를 대꾸할 필요성이 없다고 맞받아친 것 역시 흔치 않은 일임.

- ◇ 정부, 日 외무상 '망언'에 강력항의 =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일본 외무상은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최근 공세의 수위를 높였음. 겐바 외무상은 독도 문제에 언급,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라고 말해도 좋으며, 오늘부터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쓰겠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불법 상륙"이라고 주장했음. 우리 정부는 이런 부당한 주장에 강력히 항의하며 발언의 철회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맞받아쳤음.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명명백백히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음. 외교가에서는 각종 외교 관행을 무시한 채 양국간 설전과 감정싸움이 격화되는 것을 두고 관계 개선 분위기는 당분간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음

#### ○ <日총리 독도 관련 기자회견 요지>(8/24, 연합뉴스)

-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24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할 명백한 근거가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일본의 주권에 관련된 사안"이라고 주장했음. 노다 총리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거듭 제안하며 "국가의 영토 주권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태도로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하고 불퇴전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음. 다음은 노다 총리의 모두 발언.
- ◇ 모두 발언 = 이달 들어 우리나라(일본) 주변 해역에서 주권에 관련된 사안이 잇달아 일어나 정말로 유감스러움. 이런 행위는 간과할 수 없음.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은 주권과 영토·영해를 지키는 것임. 나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냉정하고 침착하게 수행하고 불퇴전의 각오로 임하겠다. 다양한 사안에 계속 냉정하게 대응할 테니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길 바람. 일본은 국토 면적은 세계 61번째지만,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합친 바다의 넓이는 세계 6번째인 해양 국가임. 이는 다케시마(독도)나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포함해서 6천800개가 넘는 낙도(落島,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섬)가 있기 때문임. 해양국가 일본의 광대한 경계를 지키기 위해서 여야 경계를 넘어서 '올재팬(All Japan)'으로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진행할 일은 차근차근 추진해야 함.
- 민주당은 정권 교체 후 이전 정부가 해온 것 이상으로 대처해 왔음. 우선 낙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년과 금년 낙도 49곳의 이름을 짓고, 주변 해역의 경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해상보안청(해경) 직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정당성을 외국에 주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올해 4월 일본이 주장한 대륙붕이 유엔 기관에서 인정됐음. 이처럼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는 것은 주장의 정당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매우 좋은 방법임. 최근



- 한국 정부에 다케시마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공동 제소하자고 제안한 것도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원을 받기 위한 것임. 내가 선두에 서서 다케시마 등 영토·영해를 지키고 우리의 주장을 국내외에 알리겠음.
-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다케시마에 상륙한 데 대해서도 내가 기자회견에서 유감을 표명했고, 외교 경로로도 항의했음. 다케시마가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일본의 영토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음. 어민들은 에도(江戸) 시대 초기에 막부(당시 정부)의 면허를 받아서 다케시마를 이용했고, 적어도 17세기 중반에는 영유권을 확립했음. 1905년에는 내각회의 결정으로 시마네현에 편입해서 영유 의지를 재확인했음. 한국측은 우리보다 먼저 실효 지배했다고 주장하지만, 근거라는 문헌은 애매하고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가 없음.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과정에서 일본이 다케시마를 포기할 것을 미국은 이를 거부했음. 한국은 그런데도 불법적인 이승만 라인(평화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점유했음.
  - 다케시마는 역사 인식의 문맥에서 논할 문제가 아니고, 한국의 일방적인 점거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방향성에 맞느냐가 중요함. 한국도 말할 부분이 있겠지만 자국이 생각하는 바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입장이 서로 다른 두 나라 사이에서 건설적인 방법이 아님.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결론 내는 게 좋음. 오늘 국회 결의에 따라서 우리 주장을 외국에 알리는 작업을 강화하고, 정부의 대응 태세를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음. 센카쿠 열도는 다케시마와 역사적 경위가 다르지만 일본의 고유 영토이고 현재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음. 불법 상륙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감시·경계에 온 힘을 쏟겠음. 북방영토(쿠릴 4개 섬)는 일본 국민의 문제이고, 괴로움을 당한 이들의 인도적 문제이기도 함.
  - 우리 국익을 지키도록 대처하겠지만 국내 강경 여론을 부채질하는 것은 국익에 맞지 않음. 평화적·외교적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 해양 국가 일본은 물론이고, 아시아의 번영에도 불가결함. 당사자들이 늘 큰 국면을 보고 냉정함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함.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파트너이자 인접국인 한국의 현명한 여러분은 (일본과) 주장의 차이는 있겠지만 서로 냉정하게 대응하길 바램. 기본적인 외교 예의마저 잃은 언동이나 행동은 서로에게 상처를 줌. 한국의 신중한 대처를 바램. 모든 문제에 냉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의 미래를 위해 인접국과 함께 노력하겠음.

### ● 日 "독도 불법점거"..韓 "부당주장 그만"(8/24, 연합뉴스)

- 독도와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간 공방은 24일에도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았음. 일본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직접 나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거듭 주장했고, 일본 국회는 '한국의 독도 불법점유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전방위 공세를 펼쳤음. 이에 맞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음.



- 노다 총리는 독도·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에 관한 내외 신 기자회견을 갖고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영토주권을 지키기 위해 불퇴전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노다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독도에 대해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돼 있다고 인식한다"고 말했고,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불법적 상륙"이라고 비난했음.
- 정부는 일본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반박했음.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노다 총리 기자회견 후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음. 조 대변인은 "일본은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와 힘을 합쳐 한일간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음.
- 일본 중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 발언에 항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음. 결의문은 "한국이 일본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시설 구축을 강행해 왔다"면서 "조속히 불법 점거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 굳은 표정의 일본 노다 총리일본 국회가 독도 관련 결의를 한 것은 1953년 이승만 라인의 설정과 관련, '일한 문제해결 촉진 결의' 이후 59년만임. 또 아즈미 준(安住淳) 재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5월 합의한 한국 국채 매입 계획에 대해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말해 유보 방침을 표명했음.
- 우리 정부는 독도 결의문 채택을 즉각 철회할 것을 일본에 요구했음.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본 중의원이 명명백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와 우리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담은 결의를 채택한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독도 도발과 주요 인사들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서는 외교채널을 통해 단호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키로 했음. 정부는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한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일본 외무상의 '망언'과 관련, 이날 외교문서를 통해 공식 항의했음. 신각수 주일 대사는 이날 겐바 외무상의 초치로 외무성을 방문, 전날의 한국 외교관 출입 봉쇄에 항의하며 유감을 표명했음.
- 그러나 겐바 외무상은 한국의 노다 총리 친서 반송에 항의하고 이 대통령의 일왕 사죄 요구 발언에 대해 사죄와 철회를 거듭 요구했음. 하지만 한일간 충돌은 계속됐지만 노다 총리가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삼가는데다 청와대도 냉철함을 유지한다는 기조여서 냉각의 장기화는 불가피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노다 총리의 기자회견에 "일본의 움직임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李대통령, 지난달 日 위안부 해결 의지 타진>(8/24, 연합뉴스)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일본의 위안부 문제 해결 의지를 타진했던 것으



로 24일 알려졌음. 청와대 한 핵심 참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7월 중순께 신각수 주일대사를 청와대로 불러들여 일본 내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면서 "특히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전 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음. 이 자리에는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도 배석했던 것으로 전해졌음.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강한 어조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한 만큼 후속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한 것임.

- 이에 따라 신 대사는 다시 돌아가 정관계 인사를 두루 접촉하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동향을 파악했으나 일본의 역사 인식이 과거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고 한 것으로 전해졌음.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양국간 과거사 매듭을 풀기 위해 신 대사를 통해 일본에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지만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음.
- 또 일각에서는 위안부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자 이 대통령이 경고 차원에서 독도를 방문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지만 청와대는 "독도 행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으로 위안부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처음으로 위안부 문제를 거론한 것이나 최근 일왕(日王)에게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촉구한 것은 일본의 무책임한 태도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임. 앞서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올바른 역사에 반하는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었음.

#### ● 日외상 "총리 친서 한국에 재송 않겠다"(8/24, 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한국이 우편으로 반송한 노다 총리의 친서를 다시 한국에 보내지 않기로 했음. 교도통신에 의하면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은 24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친서를 한국이 반송한 것과 관련, "우편으로 일본 정부에 돌아온 친서를 다시 송부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음. 한국 정부는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한 노다 총리의 친서를 23일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돌려보내려 했으나 일본 정부가 접수를 거부하자 우편으로 반송했음.
- 겐바 외무상은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인 북한과의 일본인 유골 반환 관련 교섭은 과장급을 책임자로 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일본은 국장급 대화를 원했으나 북한이 난색을 표시해 과장급으로 최종 조정했음. 한편 아즈미 준(安住淳) 재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5월 합의한 한국 국채 매입 계획에 대해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말해 유보 방침을 표명했음.

#### ● 정부, '노다 日총리 서한' 반송 확인(8/25, 연합뉴스)

- 정부는 등기우편으로 반송 조치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 서한을 일본 정부가 되돌려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음.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이틀 전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한 노다 총리 서한



이 어제 오전 일본 외무성에 도착한 사실을 컴퓨터의 (배달정보) 조회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외무성에 노다 총리 서한을 반송하려 했으나 일본이 우리 외교관과의 면담을 거부하고 외무성 방문 접수 자체를 거부함에 따라 우편으로 노다 총리의 서한을 돌려보냈음. 앞서 노다 총리는 지난 1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도방문 및 일왕 사죄요구 발언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음.

- 이와 함께 정부는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제안한 일본의 구상서를 반박하는 외교문서(구상서)도 실무 차원의 초안을 마무리한 채 상부 결재만을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음. 이에 따라 정부 구상서는 이르면 내주 초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에 전달될 것으로 보임. 구상서에는 '독도에는 분쟁이 없기 때문에 ICJ에 갈 이유도 없고, 가지 않겠다'는 그간의 정부 입장이 확고하게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 당국자들은 이 구상서에 일본측 주장을 반박할 새로운 역사적 사실이나 논리가 담겨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음.

#### ● "일본인 88명 독도로 본적 옮겨"(8/25, 연합뉴스)

- 독도로 본적을 옮긴 일본인이 88명에 이른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음. 지난 1월 79명에서 9명이 늘었음. 일본 정부가 지난 2005년 5월에 국회 답변에서 밝힌 숫자는 26명이었음. 일본의 본적지는 지번이 있으면 현 거주지와 상관없이 일본이 영토라고 주장하는 곳 어디로든 옮길 수 있음.
- 쿠릴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이나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 열도, 심지어 산호초에 솟은 바위에 인공구조물을 쌓은 오키노토리(沖ノ島)에도 본적지를 옮긴 이들이 있음. 본적 이전은 실제로는 호적을 관리하는 관청이 바뀐다는 의미임. 한국에서는 독도로 본적을 옮긴 이가 2천700여명이고 독도에 거주하는 주민도 있음.

#### ● <한일갈등 심화> 갈등 일지(8/26, 연합뉴스)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하면서 불거진 한일 갈등이 3주째에 접어들었음. 독도 방문에 이은 이 대통령의 일왕 사과 요구 발언과 일본 정부의 독도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행 제안,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서한 발송, 이 서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송 결정, 일본 주요 정치인들의 '망언' 사태 등이 이어지며 양국은 유례없는 감정적 대결 양상까지 보이며 대립을 거듭했음. 다음은 지난 보름간의 한·일 갈등 진행 상황.
- ▲2012.8.10 =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독도 방문. 일본 정부, 이에 항의해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를 본국 소환.
- ▲8.11 = 일본 우익단체에 속한 남성이 히로시마(廣島) 한국 총영사관에 벽돌을 던짐.



▲8.14 = 이 대통령, 교사 워크숍 방문한 자리에서 "(일왕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으면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분들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면 좋겠다"고 언급. 일본 반발

▲8.15 = 이 대통령,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올바른 역사에 반하는 행위"라면서 "전시(戰時) 여성인권 문제로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힘.  
= 일본 민주당 정권 출범후 처음으로 일부 각료들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8.16 =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역사 문제는 일본과 타협할 수 없다"고 밝힘.

▲8.17 =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일본 관방장관, 기자회견을 통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행을 한국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발표. 외교부 대변인 "일본의 독도문제 ICJ 회부 계획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

=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에 유감을 표하는 서한을 주일 한국대사관에 전달.

▲8.21 = 일본, 한일 수교 후 처음으로 우리 정부에 독도 문제의 ICJ 제소를 제안하는 내용의 구상서(외교서한)를 공식 전달.

▲8.22 =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일본 외무상, 독도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으며 이 대통령의 방문은 불법상륙"이라고 발언.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 대사, 밤 비행기로 귀임.

▲8.23 = 한국 정부, 노다 총리 서한 반송 결정. 일본 외무성, 서한반송 위해 방문한 주일대사관 참사관 면담 거부. 주일대사관, 등기우편으로 서한 반송.

= 노다 총리, 이 대통령의 '일왕 사과' 관련 발언에 "상당히 상식에서 일탈하고 있으며 사죄하고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 청와대 핵심 관계자 "말 같지 않은 주장에 대꾸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반박.

▲8.24 = 노다 총리, "영토 주권을 지키기 위해 불퇴전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힘. 저녁 특별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 한국 외교부 대변인, "부당한 영유권 주장으로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고 논평.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과 요구 발언에 항의하는 결의문 채택 (독도 결의안 59년만에 채택).

= 외교부, 겐바 외무상 발언에 항의하는 외교문서 발송. 겐바 외무상, 신각수 주일대사 초치해 노다 총리 서한 반송에 항의·이 대통령의 일왕 사죄 요구 발언에 사죄·철회 요구. 신 대사, 한국 외교관 출입 봉쇄에 항의·유감 표명.

● **日총리 "李대통령 독도 강경자세 내정문제도 영향"(8/26, 연합뉴스)**

-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내정 상의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26일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지신문 등에 의하면 노다 총리는 25일 일본의 노조 단체인 렌고(連合)의 고가 노부아키(古賀伸明)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강경한 자세에 대해 "내정 문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독도 방문을 정치적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시각이어서 한국 정부의 반발이 예상된다.

- 요미우리신문은 "친형이 구속되는 등 정권 기반이 흔들리자 이 대통령이 독도 문제를 정권 부양에 이용하고 있다는 견해를 (노다 총리가)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노다 총리는 독도 문제에 대한 향후 대응 방침과 관련 "냉정하고 의연한 태도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다 총리의 영토문제와 관련한 지난 24일 기자회견은 주변의 건의가 아닌 총리 스스로 23일 밤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 신문은 "영토와 영해를 수호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입장 천명을 총리 자신이 선두에 서서 하겠다는 생각하에 기자회견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 총리실 관계자는 "(독도문제에 대한) 한국의 언동으로 문제가 증폭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노다 총리는 24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역사적 법적 근거 없이 힘으로 독도에 대한 불법점거를 시작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 라. 한·러 관계

### ● 러 제작사, 나로호 1단 로켓 한국 이송 시작(8/23, 연합뉴스)

- 한국의 우주발사체 나로호에 쓰일 러시아제 1단 로켓의 한국 이송이 시작됐다고 로켓 제작사 흐루니체프 우주센터가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이타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보브레네프 흐루니체프 대변인은 이날 밤부터 1단 로켓의 수송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단 로켓은 앞서 20일 모스크바에서 열차 컨테이너에 적재됐고 며칠 내에 남부도시 울리야노프스크로 이송된 뒤 그곳에서 한국 부산까지 항공편으로 운송될 예정이다. 그 뒤 다시 배로 나로호 발사기지로 옮겨짐.
- 2004년 체결된 한국과 러시아 양측간 계약에 따라 나로호의 1단 로켓은 러시아에서, 2단 로켓과 탑재 위성은 한국에서 각각 제작됐다. 나로호 발사는 2009년과 2010년 각각 시도됐으나 실패했고 이번이 세번째 도전임. 3차 발사는 오는 10월로 예정돼 있음.
- 현지 유력 일간 '이즈베스티야'는 이번 3차 발사로 러시아와 한국 간 우주기술 협력 사업이 끝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2년 동안 양국 우주당국 사이에 너무 많은 불만이 누적돼 왔기 때문이란 것임. 한-러 양측은 2010년 제2차 나로호 발사 실패 원인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다 결국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신문은 통상 발사 실패 원인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으면 그 다음 발사를 미루는 것이 관례지만 나로호는 3차 발사를 시도하기로 했다며 이는 양국 최고 지도자가 2010년 정상회담에서 3차 발사에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그러면



서 만일 3차 발사도 실패하면 러시아 로켓 우주 산업의 명성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음. 설령 세차례 발사 실패의 책임이 모두 한국 측에 있는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나로호 설비의 80%가 러시아제고 특히 1단 로켓은 러시아가 소련 붕괴 후 개발한 신형 '앙가라' 로켓이란 점에서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 지적임.

- 신문은 이어 경제적 측면에서 러시아는 3기의 로켓과 일부 발사대 설비까지를 제공한 대가로 1억9천800만 달러(약 2천200억원)란 크지 않은 돈을 벌었다고 지적했음. 신문은 한국 측이 러시아 로켓을 택한 이유도 경제적 측면이 강하다며 다른 나라에서 유사한 로켓을 제공받았다면 이보다 훨씬 큰 비용을 지불해야 했을 것이라고 부연했음. 신문은 또 나로호에 개발 단계의 앙가라 로켓을 사용한 것과 관련한 논란도 소개했음. 흐루니체프사 지도부가 앙가라를 나로호에 장착해 비행실험을 실시했다고 한 발언을 한국에선 러시아가 미완성 제품을 한국 비용으로 실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논란이 일었다는 설명이었음.

#### 마. 미·중 관계

##### ● "中, 美 MD 위협 차세대 ICBM 개발"(8/22, 연합뉴스)

- 중국이 핵탄두를 10개까지 한꺼번에 장착할 수 있는 차세대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인 동풍(東風)-41(DF-41)을 개발해 최근 시험 발사했다고 환구시보(環球時報)가 22일 영국 군사 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클리를 인용, 보도했음.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클리에 따르면 중국의 전략 미사일 부대인 제2포병사령부는 지난달 24일 3세대 ICBM인 DF-41을 시험 발사했음. DF-41은 현재 실전 배치된 DF-31보다 사거리가 늘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진전은 한 개의 미사일에 별도의 목표물을 독자적으로 공격하는 핵탄두 10개를 동시 탑재할 수 있는 점임.
- 이는 중국이 본격적으로 MIRV(다핵탄두 미사일) 개발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함. 음속의 4~8배로 비행하는 핵탄두들이 동시에 떨어지면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미국은 DF-41 개발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클리는 전했다.
- 아울러 사정 연장도 미국에 큰 위협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은 1999년에 DF-31을, 2002년에 개량형인 DF-31A를 실전 배치해 운영 중임. DF-31A의 경우 사거리가 1만1천~1만2천km로 미국 본토의 서부 지역 대부분을 사정권에 두고 있음. 따라서 사거리가 연장된다면 미국 중부 지역, 나아가 수도인 워싱턴 D.C.를 포함한 동부 지역까지 중국의 핵위협에 노출됨. 그러나 환구시보는 중국의 군사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지난달 시험 발사된 미사일은 DF-41이 아니라고 부인했음. '제2포병 사정에 밝은 전문가'로 소개된 위이귀안(魏國安)은 환구시보와 인터뷰에서 "MIRV 방식의 3세대 ICBM 개발은 제2포병이 추구하는 방향이지만 7월 미사일 시험 발사는 이와 관련이 없다"며 "중국의 3세대 ICBM은 현재 개발 단계이고 이번 실험은 현존 미사일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中군사대표단 방미...군 고위층 교류 복원(8/22, 연합뉴스)**

- 중국 인민해방군의 차이잉팅(蔡英挺) 부참모장이 이끄는 군사대표단이 미국을 방문 중이라고 환구시보(環球時報)가 22일 보도했음. 대표단에는 왕닝(王寧) 베이징군구 참모장, 정첸량(鄭群良) 지난군구 부사령원, 자샤오웨이(賈曉暉) 광저우군구 참모장, 천서우민(陳守民) 인민해방군 전략계획부 부부장이 포함됐음. 신문은 지난 20일 베이징을 출발한 대표단이 텍사스 후드 기지를 비롯해 여러 곳의 미군 기지를 방문하고 미국방부와 군 고위인사들을 만나 양국 군 관련 이슈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 신문은 인민해방군 대표단의 방미는 지난 5월 량광례(梁光烈) 국방부장의 방미 이후 3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양국 군 고위층 인사교류의 복원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첨단무기를 판매하는데 반발해 미국과의 인적 군사교류를 1년여 중단했었음. 환구시보는 이번 방미는 국제 정세가 미묘하고 복잡할수록 양국이 군 고위층 인사 교류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라면서 중국의 국방예산이 불투명하다고 의심하는 미국을 설득할 기회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中의 對美 M&A, 기록적 증가<FT>(8/23, 연합뉴스)**

- 중국 기업의 대미 인수 합병(M&A)이 올 들어 기록적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23일 보도했음. FT는 전문분석기관 딜로직 집계를 인용해 올 들어 지금까지 중국이 인수한 미국 자산과 기업 규모가 78억 달러로 지난 2007년 수립된 한해 전체 기록인 89억 달러에 접근했다고 지적했다. 완다가 미국 주요 영화 배급사인 AMC 엔터테인먼트를 26억 달러에 인수한 것과 시노펙이 테본 에너지의 석유와 가스 개발권을 24억 달러에 사들인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했다. FT는 CNOOC가 캐나다 백센을 180억 달러에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노펙도 미국 가스회사 체세픽 에너지를 몇십 억 달러에 사려고 하기 때문에 그 규모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음.
- 크레디트스위스의 아시아 M&A 공동 책임자 조 갤러히는 FT에 "중국의 급속한 개발과 함께 특히 에너지와 자원에 대한 갈증이 크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갤러히는 "중국 경제가 갈수록 커지고 부유해지며 세련되고 있다"면서 "이들 모두가 (대미) M&A 급증을 부추기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석유와 가스 부문 몇몇 중국 거대 기업의 M&A 기법도 갈수록 세련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FT는 그러나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M&A는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즉, 올 들어 지금까지 486억 달러로 한해 전보다 3% 감소한 것으로 전문분석기관 머저마켓이 집계했음. 이는 지난 2003년 이후 가장 저조한 것으로 머저마켓은 분석했음. FT는 미국이 지난 2005년 CNOOC의 유



노콜 인수에 제동을 걸고 중국 통신회사 화웨이도 미국 내 M&A에 실패했으나 요즘은 경기 부진이 완연한 상황에서 당시만큼 견제가 심하지 않다고 지적했음.

### ● 中 해감선, 하와이서 美와 첫 합동해상훈련(8/25, 연합뉴스)

- 중국의 해양감시선인 하이선(海巡) 31호가 다음 달 초순 하와이에서 미국 해안경비대 선박과 첫 해상협력 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관영 차이나 데일리가 25일 보도했음. 하이선 31호는 이날 오전 10시 30분(현지시간)께 상하이(上海)를 출발했으며 내달 4일 하와이에 도착해 해상 교통 안전과 구조 등의 합동훈련을 닷새간 진행할 예정임. 중국 교통부의 관리인 천더성은 "중국 정부 선박이 미국을 방문해 합동 훈련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하이선 31호에 해상 구조훈련 용도로 헬리콥터 1대도 실어 보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이번 합동훈련은 지난 5월 미중 전략경제대화 합의 내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전했다.
- 스인홍(時朔弘) 인민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중국과 미국 간의 작은 협력 노력이 양국 관계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이번 중미 합동훈련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하와이 방문 기간에 하이선 31호 개방 행사가 예정돼 있다고 소개했음. 그러나 이런 분위기와는 달리 사실상 닌포(釣魚島, 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를 염두에 둔 미국과 일본의 도서탈환 합동군사훈련이 지난 21일부터 미국령 괌과 테니안 섬(중국명 텐닝다오<天寧島>) 해상에서 실시되는데 대해 중국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주목됨.

### 바. 미·일 관계

#### ● 日, 美정부에 독도 제소 협조 요청(8/23, 연합뉴스)

- 일본 외무성 당국자가 미국 고위 관료들을 만나 독도 문제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지아신문이 23일 보도했음.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대니얼 러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과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잇달아 만나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스기야마 국장은 회담 직후 일본 취재진에게 "미국 측에 '국제법에 근거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미국 측에 전달했다"며 "미국 측은 일관론이긴 하지만 국제 분쟁은 평화적인 수단으로, 국제법에 근거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일본의 생각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하지만 스기야마 국장은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방침에 대한 미국의 구체적인 반응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음. 스기야마 국장은 러셀 보좌관과 캠벨 차관보에게 중국과의 센카쿠(尖閣, 중국명 닌포(釣魚島))열도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했음. 미국측은 센카쿠 열도가 미일 안보조약 적용 대상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다시한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스키야마 국장은 또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일본인 유골 반환을 위한 북한과의 예비회담 개최 경위와 대응 방침을 설명했고, 북일 간 협의가 본격화할 경우 한·미·일 3국의 협조가 한층 중요하다는 의견을 미국 관료들과 교환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조만간 도쿄에서 한국 고위 관계자에게 북일 예비회담에 대한 일본측 대응 방침을 설명하는 방안을 한일 양국 정부가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사. 미·러 관계

##### ● 러, 美에 자국민 무기밀매상 인도 공식 요청(8/20, 연합뉴스)

- 러시아 정부가 미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지에서 복역 중인 자국민 무기 밀매상 빅토르 부트(45)의 본국 송환 요청서를 미 법무부에 보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 법무부는 이날 25년 형을 선고받고 미국 일리노이주 '메리온' 교도소에 수감 중인 부트가 본국에서 복역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류들을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 법무부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가 부트의 본국 복역에 동의할 경우 해당 절차에 필요한 서류들을 러시아 법원으로 보내게 되고 법원이 부트의 러시아 내 복역을 보증하는 판결을 내려 관련 서류를 다시 미국 법무부로 보내게 되면 송환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러시아 법무부는 설명했다. 부트 인도 장소와 시간, 절차 등은 미국 측의 송환 결정이 내려진 뒤 양국이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러시아 법무부는 덧붙였다.
- 러시아는 1983년 체결된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 조약을 근거로 부트의 본국 송환을 미국 측에 요청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모두 이 조약 가입국임. 지난 7월 초 부트의 부인 알리는 러시아 법무부에 부트 귀환에 나서 달라고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미국 법무부가 부트 인도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선 러시아 법무장관과 부트 본인이 청원서에 서명해야 함.
- 지금까지 본국 송환에 필요한 미국 측의 범죄 사실 인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던 부트는 최근 태도를 바꿔 청원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트는 지난 4월 뉴욕 연방법원에서 미국인 살인공모와 무기밀매 등 4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과 함께 25년형을 선고받았다. 국제 테러단체 등에 무기를 공급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죽음의 상인'으로 불려온 부트는 2008년 태국에서 테러단체인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으로 위장한 미국 마약단속국(DEA) 직원들의 합정수사에 걸려 체포된 뒤 미국으로 신병이 넘겨져 재판을 받았다.



## 아. 중·일 관계

### ● 中 대사, 日 우익 조어도 상륙 항의(8/20, 연합뉴스)

- 청융화(程永華) 주일 중국대사가 일본 우익인사들의 дя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 열도) 상륙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엄중한 교섭을 요청함. 20일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에 따르면 청 대사는 전날 일본 외무성 고위층과 접촉해 이런 입장을 전달함. 청 대사는 дя오위다오가 중국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중국의 영토주권을 훼손하는 일을 중단하라고 촉구함.
- 앞서 중국 외교부는 친강(秦剛) 수석대변인 이름으로 "일본 우익분자들이 불법적 행위를 통해 중국 영토주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발표문을 냄. 홍콩 시위대가 15일 중일 영토분쟁 지역인 дя오위다오에 상륙한 데 이어 일본의 기초 자치단체 의원을 포함한 우익인사 10명이 19일 дя오위다오에 상륙해 서로 자국 주권을 주장함.
- 이런 가운데 중국 언론매체들은 일본이 이번 дя오위다오 분쟁 사태를 계기로 '친중파'로 분류되는 니와 우이치로(丹羽宇一郎) 주중 일본대사를 교체하기로 한 데 우려를 표시함. 이토추(伊藤忠)상사 회장 출신인 니와 대사는 지난 6월 7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내의 дя오위다오 매입 모금 운동과 관련, "매입이 실행되면 일본과 중국 간에 엄중한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발언했다가 일본에서 거센 반발을 샀.

### ● 中, 日 총리 조어도 주권 주장에 강력 반발(8/25, 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의 дя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 주권 수호 주장은 "중국의 영토주권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음. 홍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노다 총리의 전날 주장을 반박했음. 홍 대변인은 우선 дя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는 중국인이 첫 발견하고 이름을 짓고 사용해온 중국 고유의 영토라고 운을 뗐음. 그는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명조 시대인 1403년 출간된 '순풍상송(順風相送)'에 현재 дя오위다오의 옛 이름인 'дя오쉬(釣魚嶼)' 등의 명칭이 발견되며 명조 때 저장(浙江)성에서 근무하던 해군 무관인 후종헌(胡宗憲)이 дя오위다오와 부속 섬을 방문한 기록이 '주해도편(籌海圖編)'에 나온다고 밝혔음. 그는 이런 기록이 바로 중국이 명조(1368~1644년) 때부터 дя오위다오를 해상 방어 지역에 넣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음.
- 홍 대변인은 일본이 1895년 청일전쟁 당시 дя오위다오를 획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건 어디까지나 불법적인 수단을 통한 강점이었던 탓에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서 나온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회담에 따르면 패전국인 일본은 불법 점유한 영토를 반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본이 강점했던 중국 북동부 지역과 대만, дя오위다오 등은 마땅히 반환돼야 한다고 역설했음. 그는 이런



국제적 합의를 무시하고 미국과 일본이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해 댜오위다오를 반환하지 않았고 1971년에는 미국이 일본에 댜오위다오 관할권을 넘겼다면, 그러나 이는 "중국 영토에 대한 사적 거래"에 불과하며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노다 총리는 전날 내외신 기자회견을 하고 센카쿠 열도는 "청일 전쟁 때 일본이 획득한 영토"라며 "국가의 영토주권을 지키기 위해 불퇴전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국 산둥(山東)성 남동부 해안도시인 르자오(日照)에서 반일 시위가 벌어졌음. 100여명 정도의 시위대는 댜오위다오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총리의 주장을 규탄했음.
- 지난 19일 광둥(廣東)성 선전에서 성난 시위대가 일본 음식점과 일제 자동차를 공격할 정도의 과격 시위가 벌어졌으나 중국 정부의 자제 노력으로 중국 내 반일 시위가 약간 수그러들었음. 통신은 아울러 현지시간으로 24일 캐나다 밴쿠버의 일본총영사관 앞에서 중국인 시위대 200여명이 "중국 영토인 댜오위다오에 대한 일본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고 전했다.

#### 자. 중·러 관계

##### ● 中 다이빙궈 "러시아와 안보이슈 협력 강화"(8/21, 연합뉴스)

-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안보이슈들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1일 보도했음. 중국의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전날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의 니콜라이 파트루세프 안보회의 서기를 파트너로 제7차 중국·러시아 전략안보 대화를 마친 뒤 이렇게 밝혔음. 다이 국무위원은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강화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양국이 유엔 현장의 목적과 국제관계의 규범 수호를 위해 일치된 행동을 지속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이 국무위원의 이런 언급은 시리아 사태와 이란 핵 문제 등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같은 입장을 유지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됐음.
- 이에 파트루세프 서기도 양국이 주요 국제이슈들에 대해 비슷한 입장이라고 화답했음. 그러면서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한 양국 정상 간 합의 내용에 바탕을 둔 실질적인 협력을 이뤄가자고 덧붙였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전략안보 대화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미국을 견제하는 문제와 북한 핵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갔음. 양국은 지난 4월 서해에서 합동 해군 군사훈련을 해 관심을 샀음.

#### 차. 일·러 관계

##### ● <러> 日과 영토분쟁 지역 실효지배 속속 강화(8/21, 연합뉴스)

- 한국, 중국, 러시아 등이 일본과 영토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한 실효 지배 조치를 강화하고 있어 주목됨. 최근 러시아가 극동 태평양 함대 소속 군함 2척을 쿠릴열도에 파견키로 한 것도 그 일환으로 해석됨.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태평양 함대 소속 상륙함 '네벨스코이'와 견인선 '칼라르'가 오는 25일부터 내달 17일까지의 극동 해역 항해 기간 중 일본과의 영토 분쟁 대상인 쿠릴열도의 쿠나시르(일본명 구나시리), 이투롭 섬과 또다른 쿠릴열도 섬인 파라무쉬르 등 3개 섬을 방문할 계획임.

- 러시아 군함들의 이번 항해는 2차 대전 말기인 1945년 8월 사할린과 쿠릴열도 점령 작전 당시 숨진 소련군 수병들을 추모하기 위한 '추모 항해' 차원에서 이뤄진다고 러시아 국방부는 밝혔다. 군함들은 쿠릴열도 등에서 전몰 수병 추모제에도 참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해군은 대일(對日) 전승기념일(9월 2일)에 맞춰 전몰자 추모제를 대대적으로 개최할 예정임. 올해로 5번째를 맞는 추모 항해는 러시아가 해군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일본과의 영토 분쟁 지역인 쿠릴열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확고히 하려는 의도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음. 이달 중순엔 쿠릴열도에서 멀지 않은 극동 나홋카에 S-400 미사일방어시스템 연대를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부터 러시아군에 실전 배치된 S-400 시스템은 600km 거리에 있는 적의 전투기, 순항 및 탄도 미사일 등을 포착해 60~400km 거리에서 격추할 수 있는 첨단 미사일임. 쿠릴열도를 포함한 극동 지역의 방공 전력을 증강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조치임.
- 일본은 홋카이도(北海道) 북서쪽의 쿠릴열도 가운데 이투롭(일본명 에토로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 등 4개 섬에 대해 역사적으로 자국 영토라며 줄기차게 반환을 주장하고 있음. 하지만 러시아는 쿠릴열도가 2차대전 후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됐다고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지난달 초 일본과의 영토분쟁 지역인 쿠릴열도 4개 섬 가운데 하나인 쿠나시르 섬을 방문했음. 이 방문에 대해 일본이 사전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러시아는 통상적 자국 영토 방문이라며 개의치 않았음.
- 메드베데프는 대통령 시절이던 2010년 11월에도 러시아 최고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쿠릴열도를 방문했고 이후 양국 관계가 심각한 갈등을 겪은 바 있음. 일본이 러시아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하는 등 강하게 항의했지만 러시아는 오히려 일본의 과도한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고 역공을 퍼부었음. 러시아는 2007부터 '2015년까지 쿠릴열도 사회·경제 발전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음. 러시아 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310억 루블(약 1조900억원)이란 거액을 투자한다는 방침임. 사회·경제 개발을 통해 실효 지배중인 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더욱 확실히 굳히겠다는 전략임.



### ● 러, 日과 영토분쟁 쿠릴열도에 군함 파견(8/25, 연합뉴스)

-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군함들이 25일 일본과 영토 분쟁을 빚고 있는 극동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를 방문하는 항해에 나섰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태평양함대 소속 '네벨스코이 제독' 상륙함과 견인선 '칼라르' 등 군함 2척이 이날 오후 1시(연해주 현지시간) 쿠릴열도와 극동 하바롭스크 지역 등을 방문하는 24일간의 항해를 시작했다. 태평양함대 대변인 로만 마르토프 대위는 "군함들이 (쿠릴열도 가운데) 쿠나시르, 이투롭, 파라무쉬르 등 3개 섬에 기항하고, 하바롭스크주(州)의 (오호츠크해에 면한) 항구도시 오호츠크도 방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다음 달 17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항해는 2차 대전 말기인 1945년 8월 사할린과 쿠릴열도 점령을 위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숨진 소련군 수병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 항해' 차원에서 이뤄진다고 러시아 국방부는 밝혔다. 군함들은 쿠릴열도 등에서 전몰 수병 추모제에 참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해군은 대일(對日) 전승기념일(9월 2일)에 맞춰 전몰자 추모제를 대대적으로 개최할 계획임. 태평양함대가 추모항해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임. 군함들은 또 태평양함대의 초기 모항이었던 하바롭스크주의 오호츠크를 방문해 도시 건설 365주년 기념식에도 참가함.
- 이처럼 러시아는 이번 항해가 통상적 '추모항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실시하는 추모항해 행사의 바탕에는 일본과의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쿠릴열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확고히 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함. 일본은 홋카이도(北海道) 북서쪽의 쿠릴열도 가운데 이투롭(일본명 에토로후), 쿠나시르(구나시리), 시코탄, 하보마이 등 4개 섬에 대해 역사적으로 자국 영토라며 줄기차게 반환을 요구하고 있음. 하지만 러시아는 쿠릴열도가 2차대전 후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됐다고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지난달 초 쿠릴열도의 쿠나시르 섬을 방문했음. 이 방문에 대해 일본이 사전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러시아는 통상적 자국 영토 방문이라며 개의치 않았음. 메드베데프는 대통령 시절이던 2010년 11월에도 러시아 최고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쿠릴열도를 방문했고 이후 양국 관계가 심각한 갈등을 겪은 바 있음. 일본이 러시아 주재 자국 대사를 귀국조치 시키는 등 강하게 항의했지만 러시아는 오히려 일본의 과도한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며 역공을 퍼부었음. 러시아는 또 2007부터 '2015년까지 쿠릴열도 사회·경제 발전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음. 러시아 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310억 루블(약 1조900억원)이란 거액을 투자한다는 방침임. 사회·경제 개발을 통해 실효 지배중인 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더욱 확실히 굳히겠다는 전략임.

### ● "러-일 10월 쿠릴 4개섬 관련 차관급회의 추진"(8/26, 연합뉴스)

- 러시아와 일본이 10월에 일본에서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를





은 간헐적으로 이어도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해왔지만 이어도가 정 기준찰 대상에 포함된다고 선언한 것은 처음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중국 고위 당국자의 이런 주장이 국내 언론에도 보도되자 외교통상부는 며칠 후 장신선(張愐<金 3개>森)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중국 정부의 진의를 따져 물었다.

- 한편 난사(南少)군도와 시사(西沙)군도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과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은 다오위다오 분쟁과 독도 분쟁을 강건너 볼로 여기지 않고 예의주시하고 있음. 이들 국가는 특히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려는 방침에 주목하고 있음. 베트남과 필리핀 전직 외교관들과 정부 인사들은 남중국해상에서의 중국의 해양 패권 추구를 저지하기 위해 일본과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필리핀의 한 전직 대사는 영유권 문제는 국제법을 초월하는 해당 국가의 이익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ICJ 등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정부의 한 인사는 필리핀도 남중국해상의 영유권 분쟁과 관련, 중국을 ICJ에 제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독도 문제에 대한 ICJ 제소 계획을 눈여겨 보고 있다고 말했다.

#### ● 日 노다 총리, 독도문제 한국에 신중대응 요구(8/21, 연합뉴스)

-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21일 한국에 독도 문제와 관련 신중한 대응을 요구했음. 교도통신에 의하면 노다 총리는 이날 오전 독도 문제와 관련한 관계 각료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한국 측이 생각을 깊이 해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관련 "매우 유감이다"면서 "의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이날 각료회의에는 노다 총리 외에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부총리,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이 참석했음. 일본 정부는 이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에 대한 사죄 요구와 관련한 대응조치를 논의했음.

#### ● "美, 아시아 미사일방어 체계 확대" <WSJ>(8/23, 연합뉴스)

- 미국이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 보도했음. 이 구상은 탄도 미사일 추적용 고성능 레이더 기지 두 곳을 더 건설하고,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 해병의 단기적 증강 배치 등으로 구성됨. 미국 측은 이 구상이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하지만 미국 내 안보 전문가들도 이 구상이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실제로 이 방안이 추진될 경우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됨.
- 신문에 따르면 탄도미사일 조기 추적에 쓰이는 X밴드 레이더 기지를 일본 남부에 추가 건설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 미 관리들은 일본 정부가 승낙하면 수 개월 안에 레이더 기지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



음. X밴드 레이더의 성능은 수천km 떨어진 곳의 야구공 크기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알려졌음. 일본 아오모리현의 X밴드 레이더 기지는 2006년부터 운영돼 왔음.

- 또 미군 태평양사령부와 미사일방어국(MDA)은 동남아시아에 X밴드 레이더 지상기지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일부 군 관계자들은 동남아시아 레이더 기지 후보지로 필리핀을 지목하고 있음. 미군은 단기적으로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해병 규모를 단기적으로 현재의 1만5천명에서 1만9천명까지 늘릴 예정임. 미군 측은 이 계획이 아프간 주둔 해병이 2만1천명에서 7천명으로 줄어드는데 따른 것이며, 오키나와의 미 해병도 다시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해군은 이미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춘 전투함을 현재의 26척에서 2018년까지 36척으로 늘리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음.
- 여기에 미 육군은 현재 건설중인 고고도광역방어(THAAD) 미사일 포대의 수를 현재의 6개보다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임. THAAD는 대기권으로 진입한 적 미사일을 격추하는 개념으로, 미사일방어 체계의 최종 단계임. 이처럼 전방위적인 MD시스템 확대 구상에 대해 미 국방부의 한 관리자는 "북한이 MD에 대한 의사 결정을 좌우하는 즉각적인 위협 요인"이라고 말했음.
- 그러나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이 구상이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음. 미군은 중국의 함정 공격용 탄도미사일이 태평양 함대의 위협 요인이라는 견해를 제기해 왔고,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레이더 기지 추가 건설은 명백히 중국을 겨냥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임. 미 의회조사국(CRS)의 스티븐 힐드레스 연구원은 MD 강화를 위한 "우리의 논리가 북한에 집중돼 있다"면서도 "실제로는 장기적 측면에서 애써 외면하던 실체인 중국을 고려한 것"이라고 지적했음.
- 다수의 전·현직 미 정부 관리들 역시 동아시아에 X밴드 레이더가 증강 배치되면 북한 전역은 물론 중국 내륙의 상당 부분까지 감시 영역에 포함된다고 인정했음. 중국 정부는 미국의 MD 확장 구상에 대한 WSJ의 질의에 즉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중국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모든 당사자가 상대의 안보 우려 사항을 충분히 존중하고 상호 이익과 상승 작용을 통해 전반적인 안보를 실현해야 하며,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의 안보보다 자신의 안보를 우선시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자신이 주변국에 위협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 다오위다오 겨냥 美日 군사훈련에 中 반발 고조(8/23, 연합뉴스)

- 사실상 다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를 염두에 둔 미국과 일본의 도서탈환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중국의 반발이 커지고 있음. 중국 신정보(新京報)는 23일 "미일 양국이 매년 여러 차례 합동 군사훈련을 하지만 다오위다오를 겨냥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중국은 외교·군사 방면에서 전방위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장사오충(張召忠)



해군소장의 기고문을 실었음. 이는 일본 육상자위대와 미군 제3해병원 정단이 지난 21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미국령 괌과 테니안 섬(중국어명 텐닝다오(天寧島)) 해상을 무대로 벌이는 일본 도서 탈환 합동훈련을 겨냥한 지적임.

- 장 소장은 우선 "일본 정부는 텐닝다오가 дя오위다오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을 들어 дя오위다오는 물론 제3국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훈련이라고 설명한다"며 "그러나 그건 거짓 해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방위당국자들도 공공연하게 дя오위다오를 겨냥한 훈련이라고 확인하고 있다"며 "훈련 내용은 미군이 공중과 해상을 장악하면 일본 자위대가 상륙부대를 보내 텐닝다오를 장악하는 게 골자"라고 덧붙였음. 장 소장은 그러면서 "дя오위다오에서 만약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본토에서 가까운 중국의 전력이 일본보다 유리하지만 미국이 개입하면 상황은 알 수 없게 된다"며 "미일 합동 전력은 중국에 큰 압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미일 양국이 합동군사훈련을 하는 이 시점에서 외교·군사방면에서 전방위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음.
- 앞서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로 국제문제 전문보도매체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2일 사설을 통해 "적어도 дя오위다오와 관련해선 중일 양국이 양보할 여지가 없고 앞으로도 대립관계가 더 고조될 것"이라며 군사적 충돌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영 신화통신도 21일 미일 양국의 도서탈환 군사훈련 개시에 대해 미국을 직접 겨냥해 "дя오위다오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음. 통신은 중일 дя오위다오 분쟁의 시초는 제2차 세계대전 후 패전국인 일본이 과거 불법 점령했던 дя오위다오를 원래 소유국에 되돌려 주지 않고 있다가 오히려 1971년에 통치권까지 일본에 넘긴 미국에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음.
- 이런 가운데 현재 방미 중인 차이잉팅(蔡英廷) 인민해방군 제1부총참모장을 단장으로 한 군사대표단은 미 국방부 고위층과 미군 고위층을 상대로 미일 도서탈환 합동훈련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시할 것이라고 관영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음.

#### ● 美 "한·일 갈등 불편.. 평화적 해결해야"(8/24,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23일(현지시간) 독도 및 과거사 문제 등을 둘러싼 최근 한국과 일본의 외교 갈등에 대해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을 거듭 촉구했음. 빅토리아 놀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일) 양국은 강력하고 중요한 미국의 동맹"이라면서 "양국 사이에 분쟁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로서는 '편치 않은(not comfortable)' 일"이라고 말했음. 놀런드 대변인은 그러면서 "양국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는 현재도 똑같다"며 "이를 평화적으로, 협의를 통해 해결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근 한·일 양국의 분쟁에 대해 "어느 편도 들지 않는다"며 '불개입' 입



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온 미국 정부가 사실상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양국 간 해결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됨. 특히 늘런드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키로 한 데 대해서도 한·일 양국간 해결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그는 이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도 없다"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양국간 해결"이라고 답했음. 듣기에 따라서는 ICJ 제소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임.

- 그는 아울러 전날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만난 것에 언급, "일본측에서 독도 문제를 꺼낸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측은 양국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는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고 전했음. 이 밖에 그는 센카쿠(尖閣, 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 간 갈등에 대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이 없다"면서 "양국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음.

#### ● 日, 동남아에 군사 기술 지원...中 견제 목적(8/26, 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동남아시아 등에 지뢰 제거 등 비전투분야의 기술 지원을 시작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6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의하면 일본 방위성과 자위대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와 몽골 등 6개국 국방 당국과 군을 대상으로 지뢰 제거와 의료 등의 비전투분야 기술 지원을 시작했음. 이는 군사력을 증대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신문은 전했다.
- 방위성은 '능력구축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군사 기술 등을 제공하고 있음. 일본은 2010년 방위대강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을 안정화하기로 한 바 있음. 하지만, 이런 지원은 충분한 내부 의견 수렴이나 정치권과의 협의 없이 이뤄지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됨. 지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공적개발원조(ODA) 방식이 아닌 방위성설치법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음. 또 비전투분야의 기술지원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상 국가의 전투능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군사작전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음.
-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원 대상 국가들이 현재 전쟁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아사히 신문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의 경우 일본이 기술 지원에 머물지 말고 무기를 포함한 자위대 장비로까지 지원을 확대하길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